

2023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서울 금천구의 출산율 및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연구

의원연구단체 『금천미래발전연구회』

(연구기관 리더스클럽)

제 출 문

금천구의회 귀하

이 보고서를 「서울 금천구의 출산율 및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연구」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 10. 31.

- 연구기관 : 리더스클럽
- 책임연구원 :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
- 연구원 : 신동현 (리더스클럽, 연구원)
- 보조연구원 : 정진아 (리더스클럽, 보조원)

< 목 차 >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인구 동향 및 정책 현황	4
1. 최근 인구 동향 및 전망	
2. 서울 금천구 인구 및 지역 현황	
3. 정부의 저출산 정책	
4. 서울시의 저출산 정책	
5. 서울 금천구의 저출산 정책	
제3장. 연구 및 국내 시찰	17
1. 청년 간담회	
2. 연구 모임	
3. 대전광역시의회 방문 간담회	
4. 충청남도의회 방문 간담회	
5.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세미나	
제4장. 타 지자체 및 해외 인구정책 우수 사례 분석	48

1. 청년 및 신혼부부의 유입
2.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수상
3. 출산 정보 포털사이트
4. 국외 인구정책 사례

제5장. 결 론 55

1. 서울 금천구 인구정책 방향 설정
2. 후속 연구 제안사항

참고문헌 59

표 목 차

[표 4]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표 10] 응답자 연령대	18
[표 11] 응답자 거주지역	18
[표 12] 응답자 거주지역	18
[표 13] 응답자 결혼 여부	18
[표 14] 응답자의 금천구 거주 혹은 활동기간	19
[표 15] 응답자의 금천구 거주 혹은 활동 만족도	19
[표 16] 응답자의 금천구 거주 혹은 활동 만족도	20
[표 17] 응답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	22
[표 18] 응답자가 생각하는 적정 자녀 수	22
[표 19] 금천구의 출산·보육·육아 관련 정책 만족도	23
[표 20] 금천구의 전반적인 문화 환경에 대한 만족도	23
[표 21] 금천구의 청년 정책 인지 정도	25
[표 22] 금천구의 청년 정책 수집 경로(복수응답자 포함)	25
[표 23] 금천구의 청년정책과 관련한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	25
[표 26] 대전광역시 주요 인구지표	30
[표 27] 대전광역시 출산율 증가 관련 인구사업	31
[표 28] 대전광역시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2023년도 사업내역	34
[표 30] 충청남도 인구 현황	35
[표 31] 충청남도 출생아 수	37
[표 32] 충청남도 어린이집 현황	38

[표 33] 저출산 관련 예산 현황38

그림 목 차

[그림 1] 2030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코로나19 상황과 혼인건수의 변화4

[그림 2] 총 인구 변화와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 변화5

[그림 3] 인구구조 변화5

[그림 4] 합계출산율 추이5

[그림 5]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5

[그림 6]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7

[그림 7] 2023년 4월 금천구 인구 및 세대수7

[그림 8] 금천구 인구 분포7

[그림 9] 20대 및 30대 인구 비율 비교7

[그림 10] 2022년 서울시 구별 합계출산율8

[그림 11] 2022년 서울시와 금천구의 연령별 합계출산율 비교8

[그림 12]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증감표9

[그림 13] 금천구 순전입, 순전출(22.8~23.8월 기준)10

[그림 14] 금천구 중학교 학업성취도11

[그림 15] 금천구 고등학교 학업성취도11

[그림 16] 서울 금천구 청년 및 저출산 관련 정책14

[그림 17] 여성안심 패키지15

[그림 18] 1인가구 only1 프로젝트	15
[그림 19] 서울 금천구 저출산 관련 정책	16
[그림 20] 청년정책 간담회 개요	17
[그림 21] 청년정책 간담회 현장	17
[그림 22] 청년정책 간담회 설문지	17
[그림 23] 주거와 관련하여 응답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자 포함)	19
[그림 24] 주거와 관련하여 응답자가 느끼는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자 포함)	20
[그림 25] 응답자가 일자리에 대해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자 포함)	21
[그림 26] 응답자가 일자리에 대해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자 포함)	21
[그림 27]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소(복수응답자 포함) ..	22
[그림 28] 금천구의 문화 환경에 불만족하는 이유(복수응답자 포함)	24
[그림 29] 금천구의 문화와 관련하여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자 포함)	24
[그림 30] 청년정책 간담회 현장(1)	26
[그림 31] 청년정책 간담회 현장(2)	26
[그림 32] 대전광역시의회 방문 간담회(1)	29
[그림 33] 대전광역시의회 방문 간담회(2)	29
[그림 34] 대전광역시의회 방문 간담회(3)	29
[그림 35] 충남도의회 방문 간담회(1)	35
[그림 36] 충남도의회 방문 간담회(2)	35

[그림 37] 카이스트 방문 (1)	40
[그림 38] 카이스트 방문 (2)	40
[그림 39] 1950년부터 2099년까지 인구 예측	41
[그림 40] 선진국과 개도국의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 추이(1950~2050)	41
[그림 41]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를 견인하는 3대 요소	41
[그림 42] 2023년 서울시 2분기 출산율	41
[그림 43] 체류 외국인 및 등록 외국인 추이	42
[그림 44] 고령자 가구 증가 추이	42
[그림 45] 인구구조에 대한 비관론	43
[그림 46]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에 미칠 영향	44
[그림 47]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낙관론	45
[그림 48]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4가지 미래전략 옵션	46
[그림 49] 영종 씨사이드파크	48
[그림 50] 영종하늘도시 체육공원	48
[그림 51] 음성군 ‘청년대로’ 간담회	49
[그림 52] 영월군 청년의 날	49
[그림 53]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안양시 우수상 수상	50
[그림 54]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시흥시 최우수상 수상	50
[그림 55] 인천 계양구 출산정보사이트 ‘아이조아계양’	51
[그림 56]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정보센터	51
[그림 57] 독일 부모수당 플러스 수급자 및 파트너십 수급자 추이	52
[그림 58] 출생시기별 독일 부모수당 수급자 추이	52
[그림 59] 일본 어린이 패스트트랙	53

[그림 60] 한일 저출산 대책안 비교	53
[그림 61] 금천구 동서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인터넷 게시물 일부 발취	55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금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금천미래발전연구회」의 금천구 인구정책 연구를 지원하고, 금천구의 출산율 및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마련 및 그에 따른 조례의 입법으로 금천구의 출산율 및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인구 정책과 관련하여 출산율과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찾고, 개발하는 연구를 중점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는 현재 인구 소멸위험지역 115곳, 25년 뒤인 2048년 228개의 시·군·구 소멸 위험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 대체출산율은 2.1명이며, 만약 이 상태로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의 인구는 3세대 안에 현재의 6% 수준까지 감소하고 60대가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간한 ‘2022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조사대상 198개국 중 가장 낮다. 더불어 2021년 한국 감사원이 발행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감소 추이가 지속된다면 2117년 한국의 인구는 1510만명으로 현재 기준 70.6%가 감소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세계은행은 1998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1965-1990년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의 약 1/3이 인구 증가로 인해 달성됐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점

을 토대로 2021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된 한국은 과거와 같은 인구 증가 효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향후 한국 경제의 침체를 유발하는 직접적 요인이 될 것이다.

청년층의 결혼 역시 문제로 작용되고 있다. 2022년 혼인 건수는 154,356 건으로 2021년보다 0.8% 감소하였고,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 일자리 부족, 그로인한 집값 상승 등이 ‘사는 것이 힘든데 결혼과 출산을 하겠냐’는 문제로 뻗어나간 결과이다.

MBC에서 지난 2022년 7월 18~21일간 조사한 청년층의 출산의향은 있음 43.7%, 없음 56.3%로 출산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였다. 그 중 여성의 65.4%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의 문제로 출산의향이 없다고 밝혔고, 금천구의 상황도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출산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문제의 특성을 조사하고, 금천구의 청년 정책 현황을 조사·연구하여 상세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고령화, 저출산 등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성공한 지자체의 인구정책들을 파악해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시스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연구의 목표는 현 금천구 청년들이 출산과 관련하여 겪는 사회적 문제를 파악하고, 금천구에 적합한 인구정책 개발 및 출산장려정책을 제안하며 지역 미래발전 모델을 개발하여 새로운 지역사회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다.

「금천미래발전연구회」 차원에서 금천구의 출산율 및 인구증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연구회에서 목표로 하는 인구정책 및 출산장려정책 개발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보조할 조례의 입법 역시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년과 가족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금천구의 경쟁력 향상을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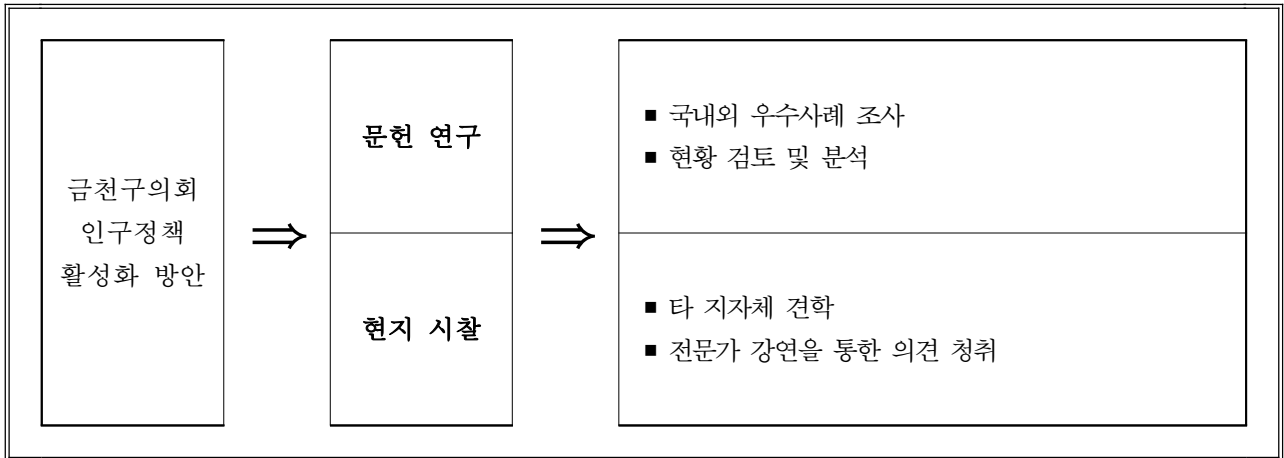
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금천구의 인구 증가를 위한 청년 및 출산정책을 개발하고 그를 보조할 조례의 입법을 위하여 진행되는 만큼 금천구의 청년 유입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우수한 사례를 찾고 타 지자체를 견학한 것을 바탕으로 연구·검토·분석을 통하여 연구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타 지자체의 우수한 출산·인구정책에 대한 상호교류를 진행하고 집행기관 참여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공간적 범위로서는 금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현황분석은 서울특별시와 금천구 내, 사례연구로는 국내외를 포함하였다. 내용적 범위로서는 금천구의 만 45세 미만의 청년 대상으로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정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는 출산·인구정책을 파악하고 분석 및 진단을 진행하였다.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언론보도 등 각종 2차자료를 활용하여 금천구의 출산·인구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둘째, 금천구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를 통한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FGI 조사 방식을 통해 금천구의 청년정책, 출산정책 등 금천구의 정책들에 대하여 금천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인구학 전문가의 세미나를 통해 금천구 정책 방향을 수립하였다. 셋째, 타 지자체 시찰을 통해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파악하고 비교하며 금천구에 맞는 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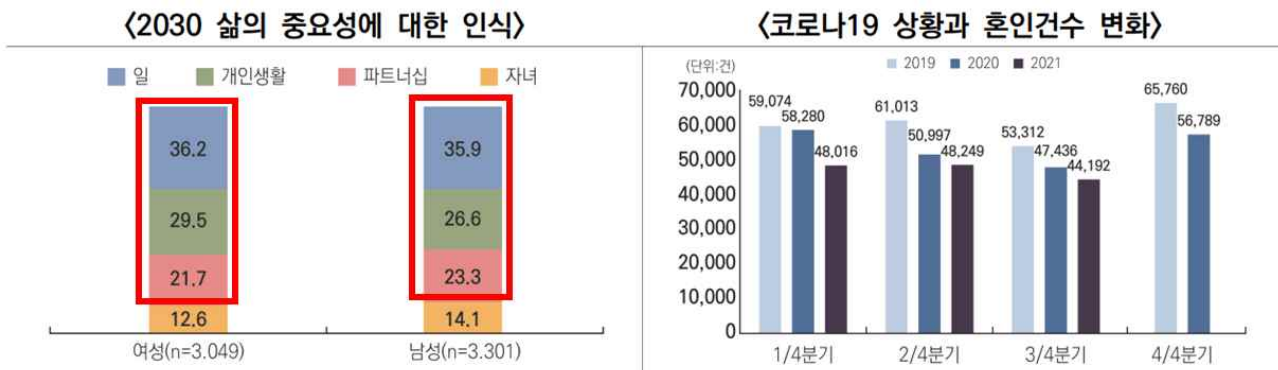
[표 4]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번 연구를 통하여 금천미래발전연구회가 출산에 대하여 변화한 청년층의 인식과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길 기대한다. 더불어 이를 파악하여 금천구의 현황에 맞는 인구 및 출산 정책의 수립이 금천구의 인구 증가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2장 인구 동향 및 정책 현황

1. 최근 인구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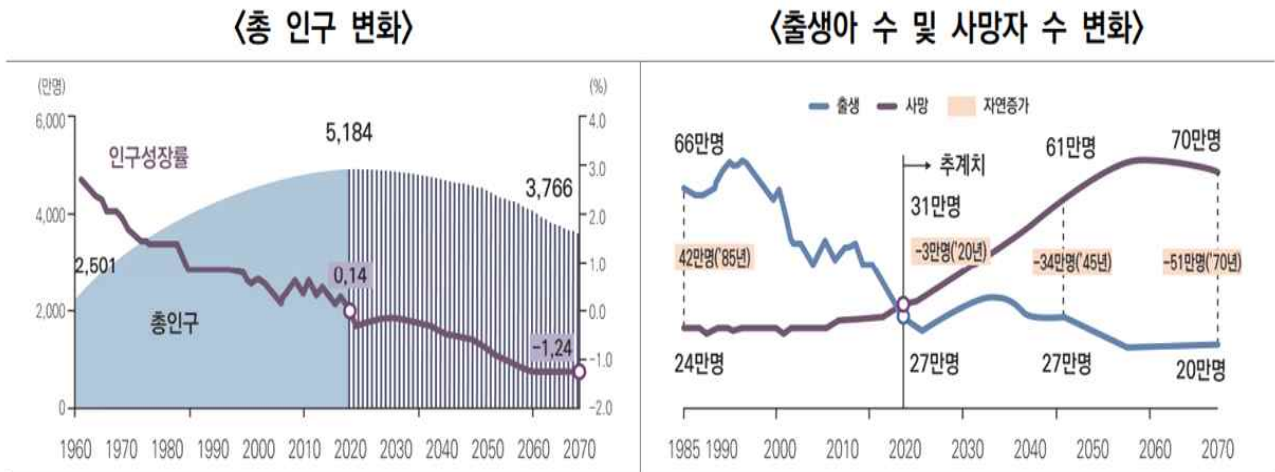
인구감소가 발생하는 요인은 출생, 사망,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출생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인구의 증가폭이 감소하고, 사망자가 증가하면 인구는 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게 된다. 최근에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 및 기대수명이 증가하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 인구의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과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 중이다.



[그림 1] 2030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코로나19 상황과 혼인건수의 변화

저출산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혼인·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와 높은 주거·취업·양육 비용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혼인건수가 급감하였고, 향후 3~4년간 출생아수와 출산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는 인구문제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뿐만 아니라, 20대와 30대 청년세대들의 삶에서 자녀 혹은

은 파트너십보다 개인의 일 혹은 개인생활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녀는 후순위로 밀리는 추세이다.



[그림 2] 총 인구 변화와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 변화

총 인구는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하여 향후 10년간 연평균 6만명 내외로 감소하여 2030년 5,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은 인구의 자연감소인 ‘데드크로스’가 2020년 현실화된 이후로 인구의 자연감소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인구구조 변화〉

	1960	198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유소년인구 비중(%)	42.3	34.0	12.2	8.5	8.8	8.8	7.7	7.5
생산연령인구 비중(%)	54.8	62.2	72.1	66.0	56.8	51.1	48.5	46.1
고령인구 비중(%)	2.9	3.8	15.7	25.5	34.4	40.1	43.8	46.4
85세 이상(%)	-	-	1.5	3.1	5.0	9.3	12.7	14.4
중위연령(세)	19.0	21.8	43.7	49.8	54.6	57.9	61.2	62.2

[그림 3] 인구구조 변화



[그림 4] 합계출산율 추이



[그림 5]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또한 출생아 수 감소로 유소년 및 학령인구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심화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과거부터 점차 심화되어 왔는데, 이는 사회적 요인, 가족정책적 요인, 가족 및 개인적 요인 등에서 찾을 수 있다. 2008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발간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이 땅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을 결혼 연령 상승 및 출산 기피와 같은 인구학적 원인, 소득 및 고용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등의 사회경제적 원인, ‘결혼은 선택이다’,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와 같은 의식이 증가하는 가치관의 변화로 정의한 바 있다. 또한, 2005년 논문(저자 김승권)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결혼·출산·양육의 비친화적 사회제도 및 문화, 양성불평등 노동시장 구조와 문화, 아동양육과 아동보호를 위한 체계 및 정책의 미흡, 과도한 자녀양육 부담과 낮은 정책지원 등을 지목하였으며 2010년 논문(저자 전희경)에서는 저출산의 요인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여성의 교육 수준 및 지위 향상 등의 사회적 요인, 성공적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등의 가족정책적 요인, 결혼 가치관과 자녀 가치관의 변화 및 다

양한 가족형태의 출현 등의 가족 및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지어 설명하였다. 10년도 더 이전에 지적된 문제점이 2023년 현재에도 해당되는 것을 보아 대한민국 저출산의 원인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출산은 지방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지역에서 나타나는 인구변화로 인해 지역의 사회·경제가 영향을 받게 되고, 이에 거주자들은 보다 나은 환경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회적 이동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다시 지역의 인구구조와 생활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키게 된다. 2008년 작성된 논문(저자 Elis)에 따르면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영향은 크게 인구감소, 상업 및 생산 분야에서의 경제활동 감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자체 단위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감소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세수가 감소하여 재정악화를 불러일으킨다. 이로 인해 1명당 부담하는 세금이 증가하고 공동 인프라 사업이 축소되며 교육환경의 악화가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로 인해 지역 경기가 침체되면 취업기회가 감소하고,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이 악화되어 기존의 지역 인구의 유출이 발생하여 지역내 인구 감소가 가속화된다. 이러한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여건과 특성이 반영된 지자체 주도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2. 서울 금천구 인구 및 지역 현황

금천구는 서울의 남서부에 위치한 자치구로, 관할구역은 가산동, 독산1~4동, 시흥1~5동 총 10개 동이 있다. 북서쪽으로는 구로구, 북동쪽 및 동쪽으로는 관악구, 서쪽으로는 경기도 광명시, 남쪽에 경기도 안양시와 인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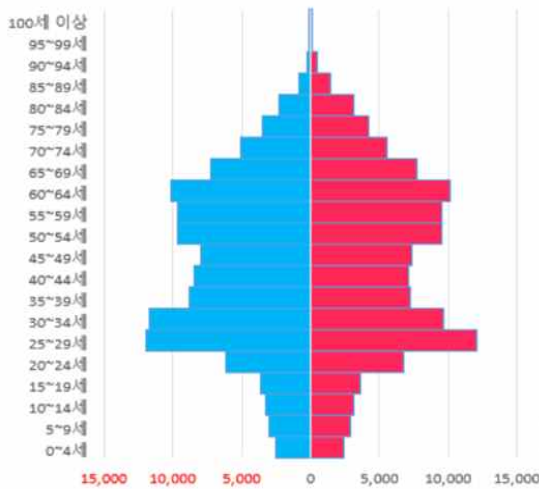
있으며 구청의 소재지는 시흥동에 있다.



[그림 6]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구분	인구수	세대수
서울 금천구	229,328명	120,274
서울 용산구	217,611명	109,735
경기 오산시	229,121명	103,728
경기 이천시	231,357명	102,774
경남 거제시	235,223명	103,859

[그림 7] 2023년 4월 금천구 인구 및 세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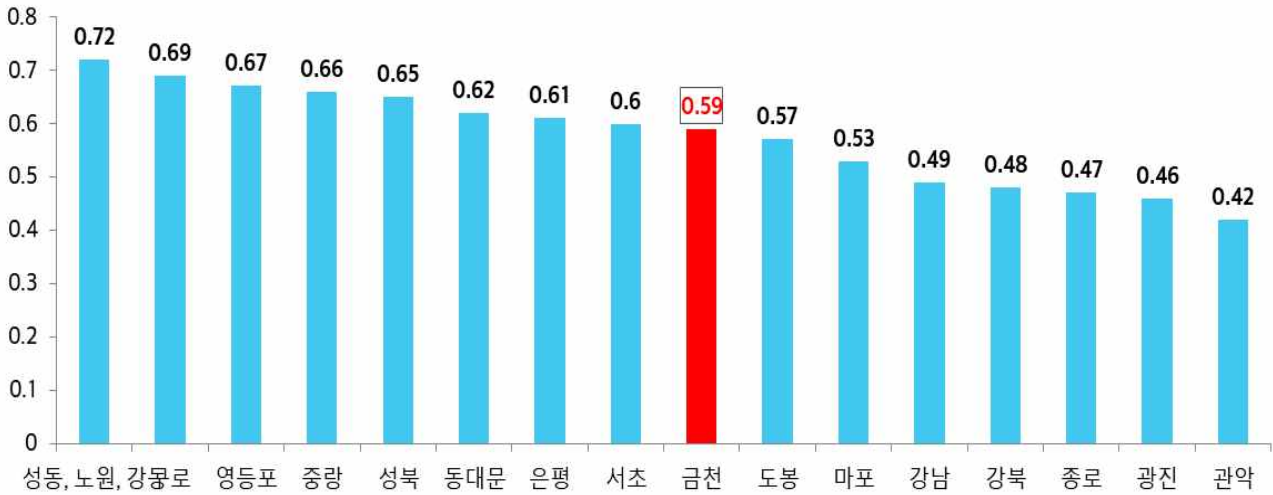


[그림 8] 금천구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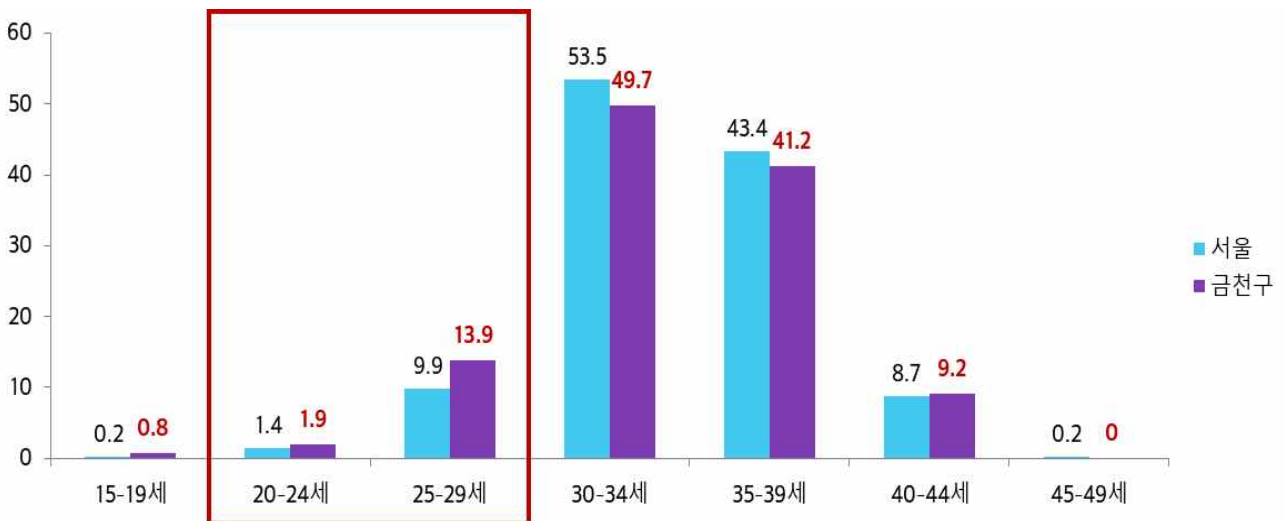
구분	20대 인구	30대 인구	합계
전국	12.89%	13.02%	25.91%
서울	14.89%	15.07%	29.96%
경기	13.26%	14.01%	27.27%
금천구	16.01%	16.20%	32.21%

[그림 9] 20대 및 30대 인구 비율 비교

2023년 4월 기준 금천구의 인구는 229,328명이고, 총 120,274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인구수가 비슷한 서울 용산구, 경기 오산시, 경기 이천시, 경남 거제시 등 타 지자체와 비교하였을 때 금천구는 타 지자체 대비 세대수가 많은 편에 속한다. 또한, 금천구는 20~30대의 인구 비중이 전국, 서울, 경기도와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그림 10] 2022년 서울시 구별 합계출산율



[그림 11] 2022년 서울시와 금천구의 연령별 합계출산율 비교

2022년 금천구의 합계출산율은 0.59로, 서울시 내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평균에 가까우나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와 금천구의 합계출산율만 두고 비교해보았을 때, 전체 합계출산율은 서울시가 근소하게 우위이나(서울시 0.593, 금천구 0.588) 15~29세와 40~44세의 합계출산율은 서울시 전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증감률(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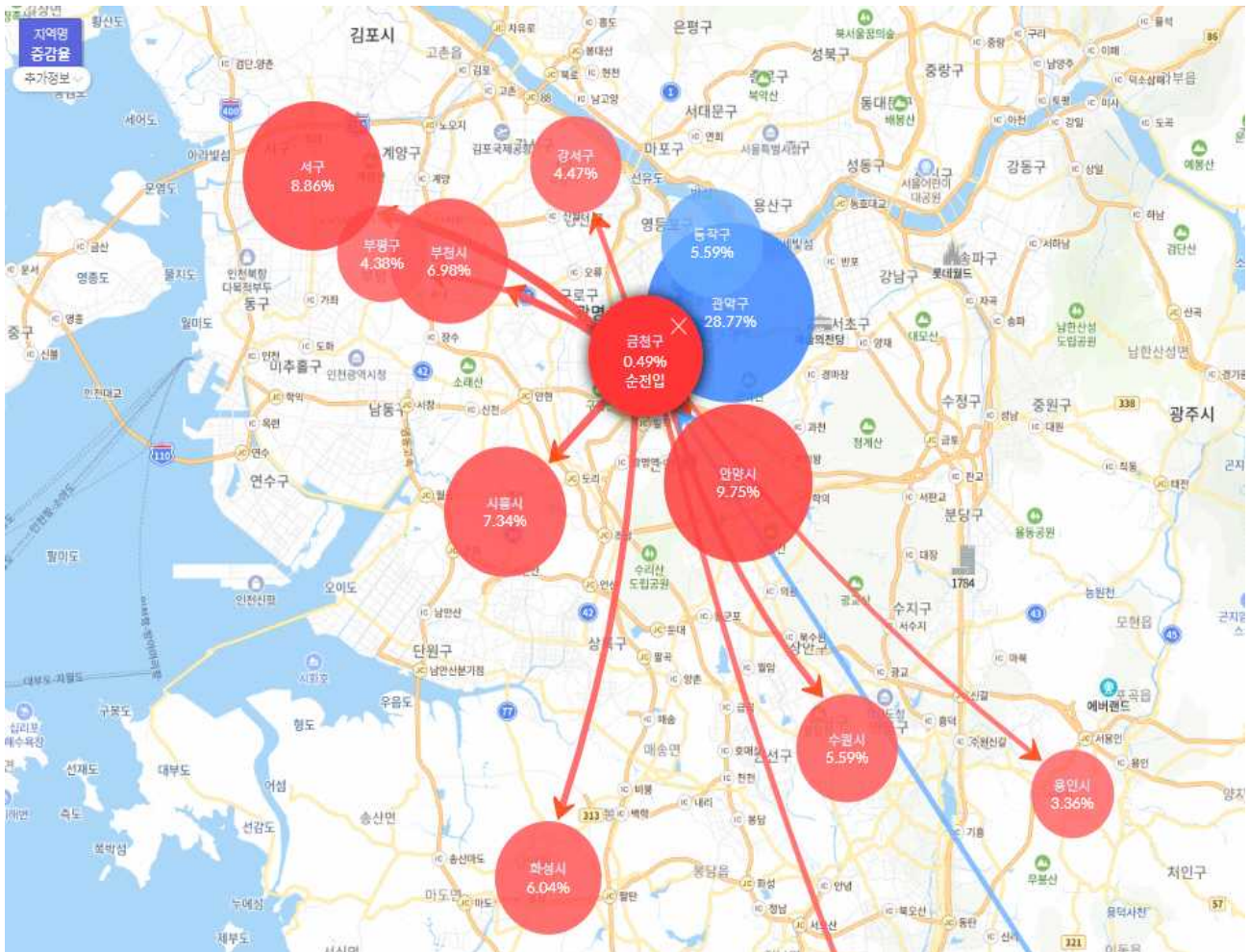
구분	2010-2022	증감률	2020-2022	증감률
서울시 전체	-817,738	▼7.93%	-173,658	▼1.83%
종로구	-10,734	▼8.08%	-3,152	▼2.58%
중구	-26,954	▼15.80%	-5,760	▼4.01%
용산구	-22,590	▼9.23%	-7,777	▼3.50%
성동구	-13,630	▼5.56%	-168	▼0.07%
광진구	-25,272	▼8.18%	-9,735	▼3.43%
동대문구	-49,867	▼14.39%	-11,402	▼3.84%
중랑구	-18,918	▼5.83%	-6,550	▼2.14%
성북구	-53,507	▼14.53%	-10,466	▼3.32%
강북구	-29,456	▼8.03%	-5,507	▼1.63%
도봉구	-35,570	▼9.47%	-6,789	▼2.00%
노원구	-24,281	▼6.20%	-4,306	▼1.17%
은평구	-30,396	▼7.47%	-3,043	▼0.81%
서대문구	-16,811	▼4.17%	-5,322	▼1.38%
마포구	-38,946	▼9.11%	-6,193	▼1.59%
양천구	-28,886	▼6.82%	-9,558	▼2.42%
강서구	-27,048	▼6.22%	-17,454	▼4.28%
구로구	-55,373	▼11.33%	-3,594	▼0.83%
금천구	-55,453	▼11.09%	-9,703	▼2.18%
영등포구	-30,241	▼6.15%	1,660	0.36%
동작구	-14,435	▼2.96%	-6,161	▼1.30%
관악구	-44,488	▼8.37%	-8,114	▼1.67%
서초구	-103,164	▼16.88%	-14,971	▼2.95%
강남구	-38,318	▼6.72%	-7,454	▼1.40%
송파구	-1,082	▼0.19%	-7,140	▼1.25%
강동구	-22,318	▼3.26%	-4,999	▼0.75%

[그림 12]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증감표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인구 증감표를 보면, 서울시 전체의 인구 증감률은 -7.93%로 총 817,738명이 이탈하였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증감률은 -1.83%로 173,658명의 이탈이 발생하였다.

금천구의 경우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인구 증감률은 -11.09%로, 총

55,453명이 금천구를 이탈하였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의 증감률은 -2.18%로 9,703명이 금천구를 떠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금천구 순전입, 순전출(22.8~23.8월 기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금천구의 순전입, 순전출을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 인접한 시군구에서 많은 전입과 전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금천구로 전입하였으며 창원시에서도 금천구로의 전입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천구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은 경기도 안양시, 시흥시, 부천시,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인천광역시, 서울 강서구 등으로 전출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 금천구 ▾ 중학교 학업성취도순 진학률순 출처: 학교알리미

순위	위치	학교명	응시자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보통학력이상)				진학률		졸업자 수
				평균	국어	영어	수학	특목고 진학률	특목고 진학수 (리하고외고국제고)	
1	금천구 시흥동	동일중학교	218명	80.1%	92.7%	78.0%	69.7%	1.0%	2명 (0명/2명)	186명
2	금천구 독산동	안전중학교	176명	78.4%	90.9%	76.7%	67.6%	0.0%	0명 (0명/0명)	136명
3	금천구 시흥동	시흥중학교	298명	72.9%	86.6%	69.4%	62.8%	0.5%	1명 (0명/1명)	175명
4	금천구 독산동	가산중학교	172명	65.3%	87.2%	54.7%	54.1%	1.6%	2명 (0명/2명)	118명
5	금천구 시흥동	문일중학교	177명	64.8%	81.4%	55.9%	57.1%	0.0%	0명 (0명/0명)	132명
6	금천구 독산동	세일중학교	163명	63.8%	76.7%	57.7%	57.1%	0.6%	1명 (1명/0명)	148명
7	금천구 독산동	난곡중학교	146명	62.8%	83.6%	52.7%	52.1%	0.0%	0명 (0명/0명)	115명
8	금천구 독산동	문성중학교	158명	61.6%	80.4%	55.1%	49.4%	0.9%	1명 (0명/1명)	107명
9	금천구 시흥동	한울중학교	227명	58.9%	75.8%	47.6%	53.3%	0.0%	0명 (0명/0명)	182명
평균			1,735명	67.6%	83.9%	60.8%	58.1%	0.5%	7명	1,299명

[그림 14] 금천구 중학교 학업성취도

금천구의 중학교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평균 학업성취도는 67.6%로 서울 전체 평균인 77.9%에 비하면 낮은 수준을 보였다. 금천구 내에서의 학업성취도는 최저 58.9%부터 최고 80.1%까지 편차가 다소 큰 편이며, 특목고 진학률은 0.5%에 불과하였다.

서울 ▾ 금천구 ▾ 고등학교 학업성취도순 진학률순 출처: 학교알리미

순위	위치	학교명	응시자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보통학력이상)				진학률		졸업자 수
				평균	국어	영어	수학	대학교 진학률	대학교 진학수 (국내/국외)	
1	금천구 시흥동	동일여자고등학교	329명	87.6%	88.5%	91.8%	82.7%	57.2%	119명 (119명/0명)	208명
2	금천구 시흥동	문일고등학교	377명	70.5%	68.2%	68.2%	75.3%	57.6%	180명 (179명/1명)	312명
3	금천구 독산동	독산고등학교	242명	54.0%	58.7%	55.5%	47.9%	38.9%	74명 (74명/0명)	190명
4	금천구 시흥동	금천고등학교	315명	52.4%	54.0%	55.9%	47.3%	38.8%	94명 (94명/0명)	242명
평균			1,263명	66.1%	67.3%	67.8%	63.3%	48.1%	467명	952명

[그림 15] 금천구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금천구의 고등학교 학업성취율 상황 역시 다르지 않았다. 금천구의 고등학교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평균 학업성취도는 66.1%로 서울시 전체 평균인 76.6%에 비해 1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천구 내에서의 학업성취도는 최저 52.4%부터 최고 87.6%까지 편차가 중학교 학업성취도에 비해서도 훨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학교 진학률은 48.1%로 서울 전체 진학률인 48.3%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정부의 저출산 정책

1950년대에는 6·25 전쟁 및 피난이 발생했던 시기로, 정부는 194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는 인구 증가를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 차원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출산을 장려하여 ‘베이비붐’이 시작되었다. 이후 정부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불임시술을 해줄 정도로 산아제한을 위해 노력하였다. 1980년대에는 자녀를 한 명만 낳을 것을 권장하였고, 이 시기에는 남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1983년부터 출산율 하락이 발생하였으나, 정부는 오히려 출산율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가족계획 사업을 시행하였고, 모자보건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해외 이민을 추진하고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지속하였다.

1990년대 이후부터 출산정책이 변화하였다. 계속해서 하락하는 출산율에 정부는 1996년 인구정책 목표를 산아제한에서 ‘자질향상’으로 변경하였고,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펼치며 방향을 선회하였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는 인구자질 및 복지정책을 도입하였고, 신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제도화하였으며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 인구복

지정책을 추진하며 인구의 복지를 챙기고 출산을 장려하였다.

현재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중앙 행정부처·지자체간 인구 문제 대응을 위한 협의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의 추진기반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아이와 부모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려 영아수당·첫만남이용권 신설, 아동수당 연령 확대(만 7세→만 8세),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 확대 등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국공립어린이집(연간 550개소) 및 온종일 돌봄(2022년 기준 53만명) 확충, 시간제 보육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14만명) 신설,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 맞춤형 청년주택 확대 등 청년의 기본적인 자립기반 보장과 같은 청년제도 시행과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도입,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전국민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회시스템의 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대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국방·주택 분야 수급문제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 교원·군인력·주택수급체계 등 시스템을 정중에 있다.

4. 서울시의 저출산 정책

서울시의 자녀 양육 정책으로는 태어난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는 것이 있다. 2018년에 아이돌봄 전담부서 신설하고, 2019년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안정적 정책추진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맞벌이, 야간근무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의 다

양화를 도모하였다. 야간연장 보육시설은 2015년 2,195개소에서 2021년 2,277개소로 증가하였고, 24시간 보육시설 역시 2015년 3개소에서 2021년 25개소로 증가하였다. 가정 양육 부모의 육아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제공하고, 돌봄공동체 활성화 위한 공동 육아방을 운영하였는데 이는 2017년 7개소에서 2021년 89개소로 증가하였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후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초등 보편 돌봄을 실현하고자 2018년 4개소에서 2021년 250개소로 확대하였다.

임신, 출산 정책에 있어서는 가임기부터 임신·출산·양육까지 생애 특정주기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및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21년 510건)으로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고, 2018년에는 모든 출생아 축하용품 지급을 처음으로 시행하였으며 2021년 신청범위·품목 확대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임산부, 만2세 미만 영유아 대상으로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을 시행하여 2013년 3개구에서 2021년 25개구까지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일자리 지원 정책에서는 여성·청년 대상 일자리·창업 지원,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력 강화의 측면에서 정책을 시행하였다. 2021년에는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직업교육 등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스페이스 살림 운영하였고, 서울 기술교육원, 서울 강소기업 육성 지원(2021년 기준 621개 기업)으로 청년 창업 및 취업연계를 도모하였다.

주거 지원 정책으로는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화를 강화하고자 하여 2021년 6,557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및 청년에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2021년 27,000명을 대상으로 청년월세를 지원하는

등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주거포털’을 운영하여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과 생활의 균형 정책으로는 일·생활 균형 기반 마련을 통한 성평등한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서울특별시 일생활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기반 마련하고,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일생활균형 지원센터와(2021년 기업컨설팅 515개), 직장맘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2021년 상담 12,695건)

그 외의 정책으로는 한부모, 다문화 등 가족 형태별 다각적 지원과 저출산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다문화가족 자녀 돌봄 서비스를 신설하였고,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2021년 1,637건) 다문화가족 취업 교육, 취업 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한부모시설 운영 및 가사·아이돌보미 파견 등의 지원을 신설하였고, 시청 직원 대상 부모육아휴직 확산, 유연근무제 사용 확대, 일-양육 병행 가능 환경 조성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자치구 인프라를 2020년 19개소에서 2021년 21개소로 확대하였으며, 2020년에는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다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료 및 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 의료비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5. 서울 금천구의 저출산 정책

구분	사업명	예산(지원비용)	내용
여성	여성안심 패키지	4억 2,800만원	1인가구 밀집 및 안전취약지역 순찰 인력 배치 안심장비, CCTV 설치 등 안심주거 환경 조성
청년	1인 가구 only 1 프로젝트	3억 9,700만원	자발적 그룹·모임 지원 통한 1인 가구 사회 관계망 확산
다문화	상호문화도시 조성 추진	2,000만원	상호문화 서포터즈단 구성·운영 다문화 소식지 발행 및 다문화 인식 개선 캠페인
저출산	어린이집 특성화 교육 강화	1억 4,000만원	1 어린이집 1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공모전 개최 및 우수 프로그램 포상
저출산	한의약 난임 치료비 지원	인당 약 120만원	3개월 첨약 비용 90%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주민 전액 지원

[그림 16] 서울 금천구 청년 및 저출산 관련 정책



[그림 17] 여성안심 패키지



[그림 18] 1인가구 only1 프로젝트

금천구에서는 여성, 청년, 다문화, 저출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구 정책 및 저출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성정책으로는 1인가구 밀집 및 안전취약지역에 순찰 인력을 배치하고, 안심장비, CCTV 설치 등 안심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인 ‘여성안심패키지’, 청년정책으로는 자발적 그룹·모임의 지원을 통한 1인 가구 사회 관계망 확산을 지원하는 ‘1인 가구 only 1’ 프로젝트, 다문화 정책으로는 상호문화 서포터즈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며 다문화 소식지 발행 및 다문

화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는 ‘상호문화도시 조성 추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정책으로는 한 어린이집당 한개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모전 개최 및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 포상을 시행하는 ‘어린이집 특성화 교육 강화’ 정책, 3개월동안 한의약 첩약 비용을 90% 할인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주민에게는 전액 지원해주는 ‘한의약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예산(지원비용)	비고
저출산	난임부부 <u>시술비</u> 지원	438,317	건강증진과
	고위험 임신부 <u>의료비</u> 지원	33,500	건강증진과
	<u>청소년산모</u> 임신출산 <u>의료비</u> 지원	2,400	건강증진과
	<u>금천아이맘건강센터</u> 운영	61,284	건강증진과
	사회보장적 <u>수혜금(출산축하금)</u>	82,400	가족정책과
	장애인가정 <u>출산비</u> 지원	7,000	어르신장애인과

[그림 19] 서울 금천구 저출산 관련 정책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금천구의 여러 부서에서 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금천아이맘건강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출산축하금)’ 정책을 통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출산비용 걱정을 경감해주고 있다.

정부 및 서울특별시와 비교해 보았을 때, 금천구의 저출산 정책은 금전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와 서울특별시 역시

금전적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이들은 서비스 제공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참고할 만한 정부의 정책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및 온종일 돌봄 확충, 시간제 보육 활성화를 들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정책 중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다양화, 야간연장 및 24시간 보육시설 확충, 육아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이 있다.

제3장 연구 및 국내 시찰

1. 청년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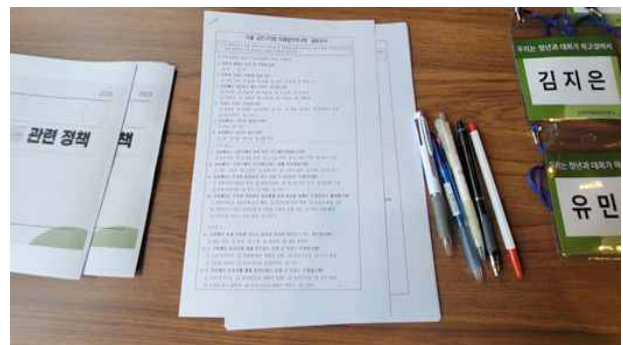
2023년 6월 30일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남녀 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설문지 작성 후 FGI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FGI 조사는 4인 1조로 진행되었다.



[그림 20] 청년정책 간담회 개요



[그림 21] 청년정책 간담회 현장



[그림 22] 청년정책 간담회 설문지

설문지 응답 확인 결과, 응답자 중 10명은 남성, 5명은 여성이며 응답자의 연령대는 20대 4명, 30대 10명, 40대 1명으로 집계되었다.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가산동 1명, 독산1동 6명, 독산2동 2명, 독산3동 1명, 독산4동 1명, 시흥1동 3명, 기타 지역은 1명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중

6명은 회사원, 3명은 자영업 종사자, 아르바이트 종사자 및 구의원은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휴직자는 각각 1명씩이며 취업준비생을 비롯한 기타 직업으로 답한 응답자는 총 2명이다.

응답자 중 기혼자는 1명으로, 해당 응답자는 자녀 1인을 두고 있다.

연령대	20대	30대	40대
응답자수	4	10	1

[표 10] 응답자 연령대

거주지역	가산동	독산1동	독산2동	독산3동	독산4동	시흥1동	기타
응답자수	1	6	2	1	1	3	1

[표 11] 응답자 거주지역

직업	회사원	자영업	아르바이트	구의원	학생	휴직자	기타
응답자수	6	3	1	1	1	1	2

[표 12] 응답자 거주지역

결혼 여부	미혼	기혼
응답자수	14	1(자녀 1인)

[표 13] 응답자 결혼 여부

금천구 거주 혹은 활동기간을 묻는 문항에서는 2명이 '1년 미만'으로, 3명이 '1~2년 미만'으로, 2명이 '2~5년 미만'으로, 1명이 '5~10년 미만'으로, 7명이 '10년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금천구에서의 거주 혹은 활동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10명,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2명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정도로 답한 응답자는 3명이 해당된다.

주거와 관련하여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문항에서는 ‘매매/보증/전세금 부담’을 선택한 응답자가 복수응답자를 포함하여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차’ 3명, ‘월세/관리비’, ‘협소한 거주 공간’, ‘불편한 교통’은 각각 2명씩으로 나타났으며 ‘문화·편의시설’과 ‘치안’을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문화콘텐츠 부족’, ‘식당’ 등의 응답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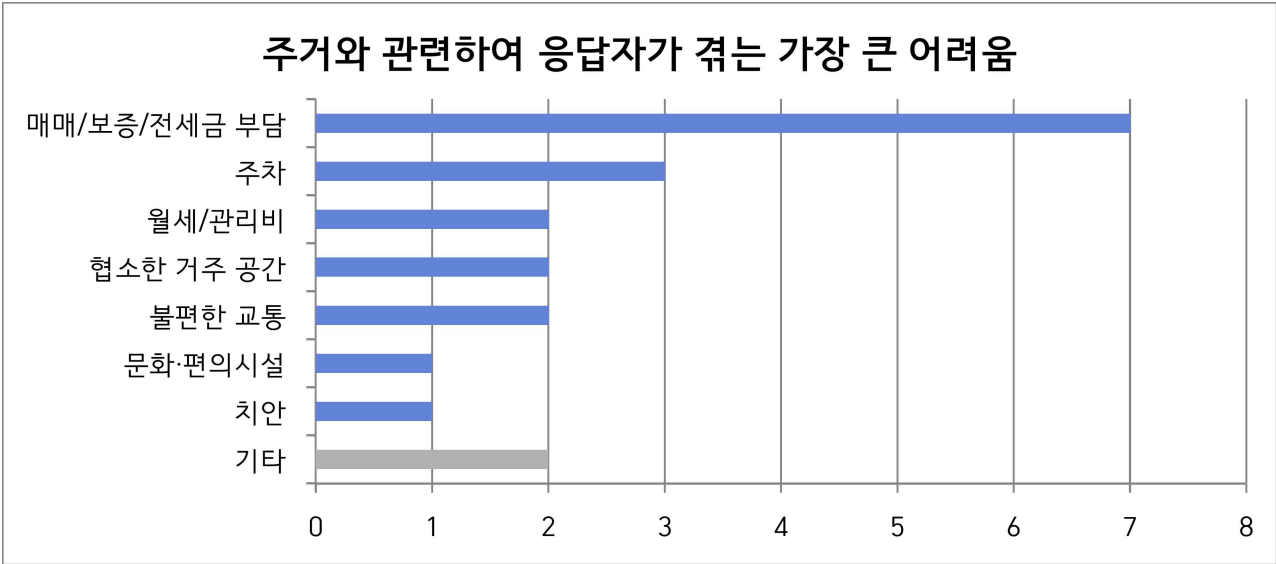
주거와 관련하여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문항에서는 ‘보증금·월세 지원’이 복수응답자 포함 6명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그 다음으로는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3명, ‘민간주택 공급 확대’, ‘세어하우스·청년 전세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치안 강화 활동’을 각각 2명이 선택하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편의시설 강화’, ‘주차공간 지원’ 등이 집계되었다.

기간	1년 미만	1~2년 미만	2~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응답자수	2	3	2	1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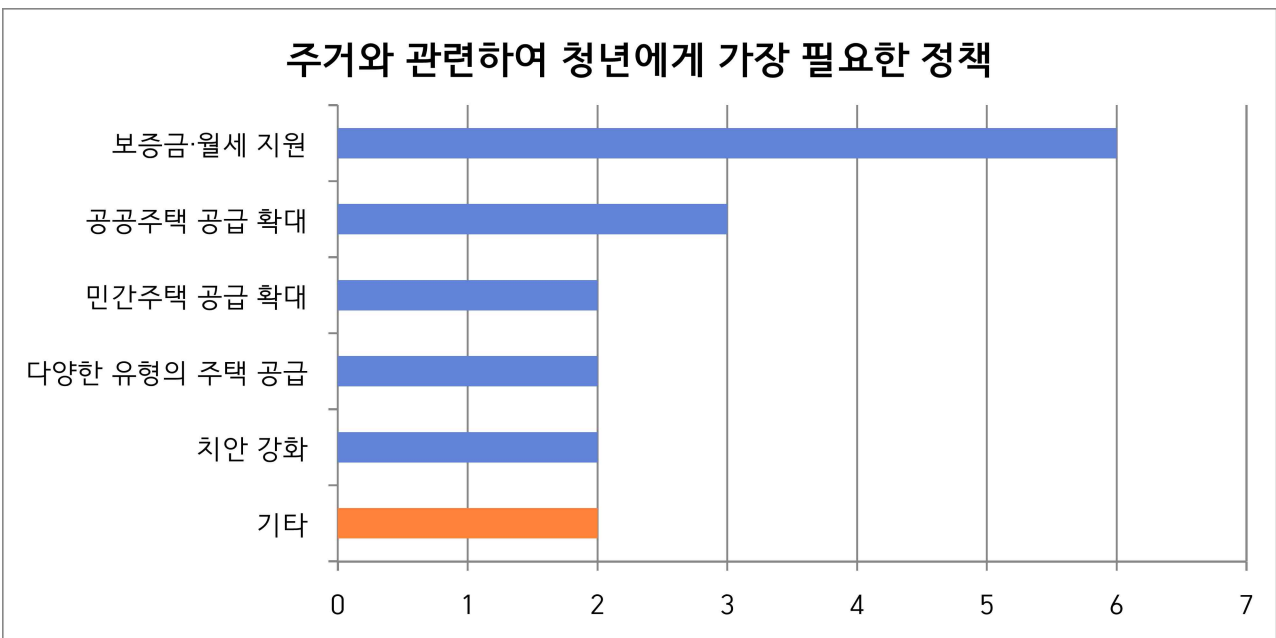
[표 14] 응답자의 금천구 거주 혹은 활동기간

만족도	만족함	보통	만족하지 않음
응답자수	10	3	2

[표 15] 응답자의 금천구 거주 혹은 활동 만족도



[그림 23] 주거와 관련하여 응답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자 포함)



[그림 24] 주거와 관련하여 응답자가 느끼는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자 포함)

일자리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일자리에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6명, 보통 정도로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6명, 불만족한다는 응답자가 1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에 답하지 않은 응답자는 2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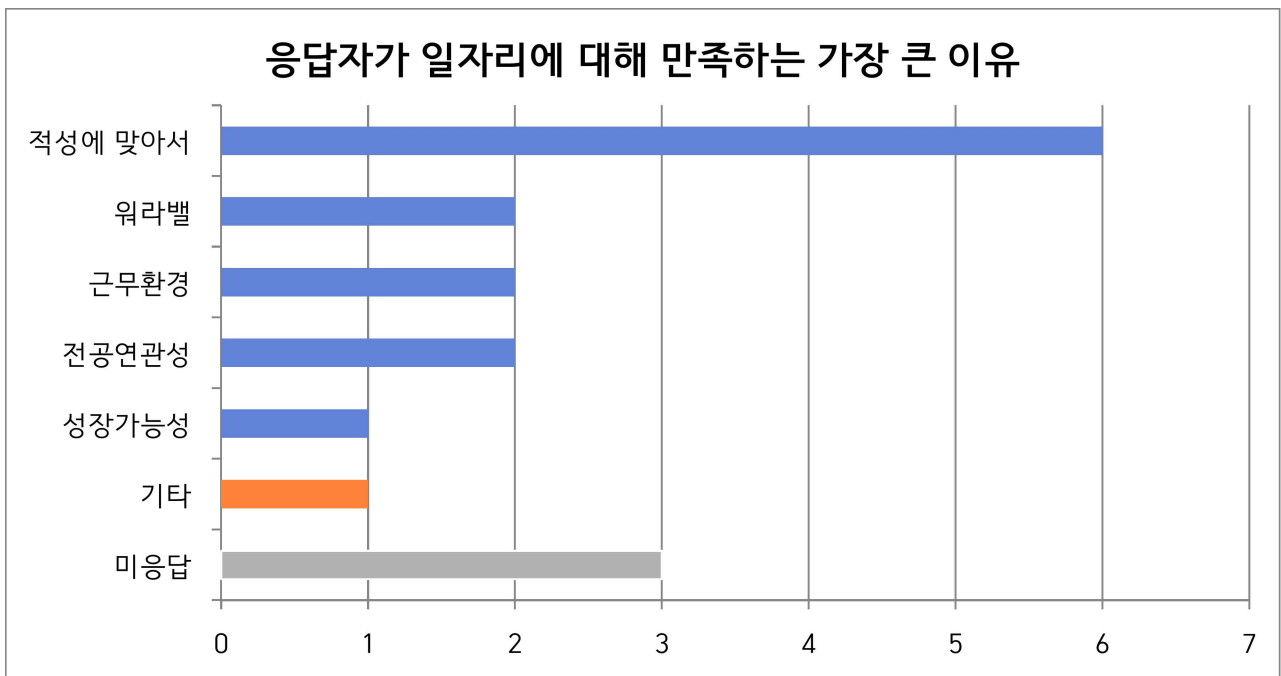
응답자가 일자리에 대해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적성에 맞아서’

로, 복수응답자 포함 6명이 해당 문항을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벨)’, ‘근무 환경’, ‘분야·전공과 관련되어서’를 각각 2명이, ‘성장가능성’ 문항을 1명이 선택하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시간 조율 편의성’이 있으며, 해당 문항에 답하지 않은 응답자는 3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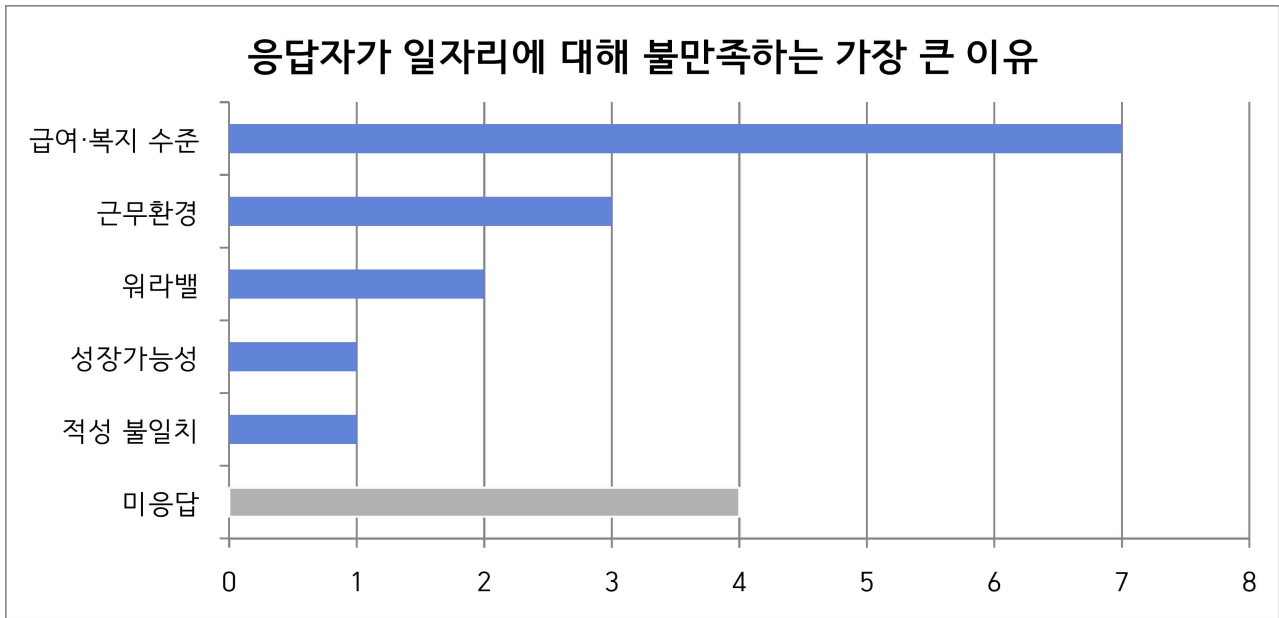
반면 일자리에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급여·복지수준’으로 해당 문항을 7명이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근무 환경’을 3명이,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벨)’을 2명이, ‘성장가능성’, ‘적성과 맞지 않아서’를 각각 1명이 선택하였다. 해당 문항에 답하지 않은 응답자는 4명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만족함	보통	만족하지 않음	미응답
응답자수	6	6	1	2

[표 16] 응답자의 금천구 거주 혹은 활동 만족도



[그림 25] 응답자가 일자리에 대해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자 포함)



[그림 26] 응답자가 일자리에 대해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자 포함)

결혼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서는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응답자가 5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10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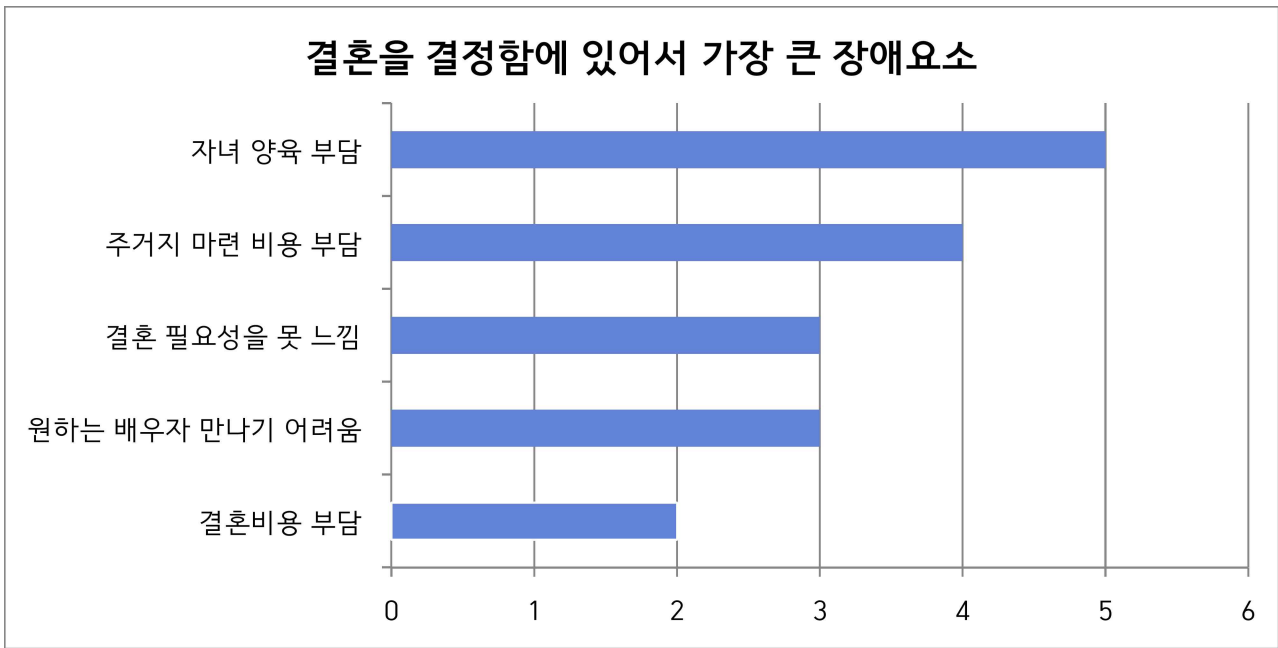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소를 묻는 문항에서는 ‘자녀 양육 부담’을 복수응답자를 포함하여 5명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거지 마련 비용 부담’이 4명, ‘결혼 필요성을 못 느낌’,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기 어려움’을 각각 3명이, ‘결혼비용 부담’을 2명이 선택하였다. 응답자가 생각하는 적정 자녀 수를 묻는 문항에서는 ‘2명’을 선택한 응답자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1명’과 ‘가지는 대로’를 선택한 응답자가 각각 2명, ‘3명’을 선택한 응답자는 1명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이상적으로는 3명, 현실적으로는 0~1명’이라는 응답이 집계되었다.

금천구의 출산·보육·육아 관련 정책의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정책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 정도로 만족한다

고 답한 응답자가 4명, 불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4명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인식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응답자수	5	10

[표 17] 응답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



[그림 27]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소(복수응답자 포함)

인원	1명	2명	3명	가지는 대로	기타
응답자수	2	9	1	2	이상적으로는 3명 현실적으로는 1~2명

[표 18] 응답자가 생각하는 적정 자녀 수

만족도	만족함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정책을 잘 모르겠다
응답자수	0	4	4	7

[표 19] 금천구의 출산·보육·육아 관련 정책 만족도

전반적인 문화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3명, 보통 정도로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4명, 불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8명으로 나타났다.

금천구의 문화 환경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원하는 시설 부족(도서관, 복지센터 등)’ 을 복수응답자를 포함하여 가장 많은 인원인 5명이 선택하였고, ‘시설 노후’ 를 4명이, ‘접근성’ 을 3명이, ‘규모 협소’ 와 ‘편의시설 불편(주차장, 휴게공간 협소)’ 를 각각 2명이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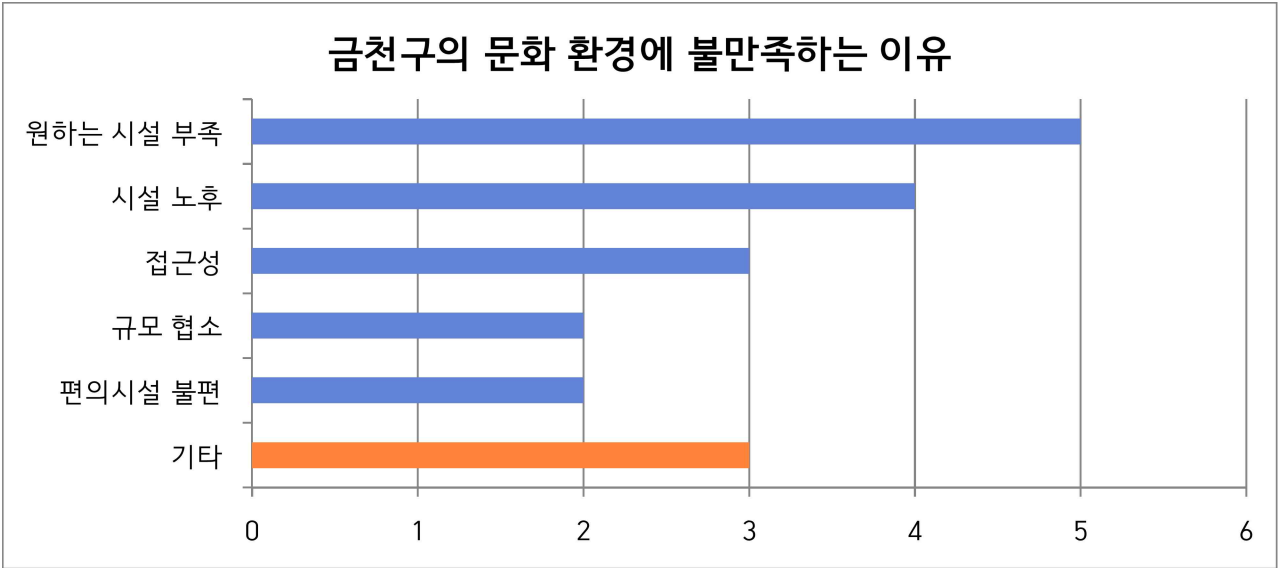
기타 응답으로는 ‘콘텐츠 부족’, ‘프로그램 다양성 및 기회 부족’ 등이 있으며 모든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 역시 1건이 있었다.

문화와 관련하여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문항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및 취미생활 프로그램’ 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가활동비용 지원’ 이 4명, ‘문화예술 창작공간 확대’ 가 3명, ‘문화창작자 및 기획자 양성’ 과 ‘소모임 육성 및 지원’ 이 각각 2명, ‘문화생활 정보 공유’ 가 1명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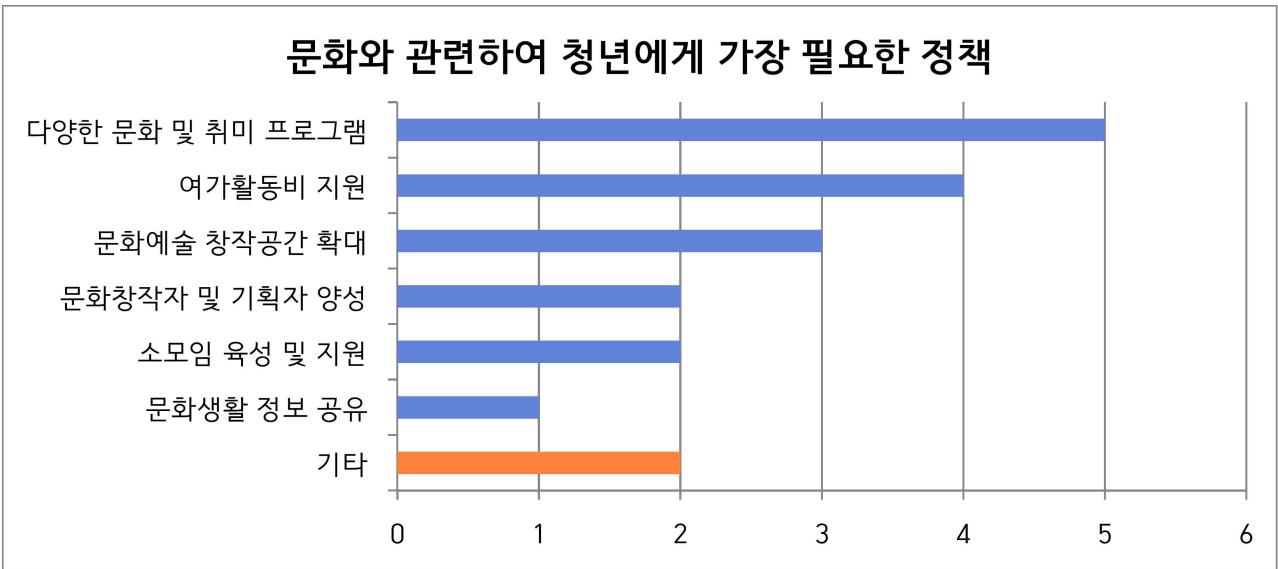
기타 응답으로는 ‘공유공간 뿐만 아니라 예술가 레지던시처럼 사무실이나 작업공간 지원’ 과 ‘민간 문화예술공간 및 기업 유치’ 가 있었다.

만족도	만족함	보통	만족하지 않음
응답자수	3	4	8

[표 20] 금천구의 전반적인 문화 환경에 대한 만족도



[그림 28] 금천구의 문화 환경에 불만족하는 이유(복수응답자 포함)



[그림 29] 금천구의 문화와 관련하여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자 포함)

금천구의 청년정책 인지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2명, 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5명, 보통 정도로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4명, 잘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가 4명으로 집계되었다.

응답자들은 청년정책을 주로 홈페이지, 인터넷, SNS를 활용하여 얻는다고 답변하였고(복수응답자 포함 12명),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얻는다는 응답자

는 3명,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1명으로 집계되었다.

만족도	매우 잘 알고 있음	어느정도 알고 있음	보통	잘 모름
응답자수	2	5	4	4

[표 21] 금천구의 청년 정책 인지 정도

정보 수집 경로	홈페이지, 인터넷, SNS	지역 커뮤니티	가족 및 주변 지인
응답자수	12	3	1

[표 22] 금천구의 청년 정책 수집 경로(복수응답자 포함)

그 외에 금천구의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묻는 문항에는 아래의 표와 같은 답변이 집계되었다.

금천구의 청년정책과 관련한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
홍보 부족
평범하게 활동하고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개발(다양한 모임, 공간 활성화 등)
생각보다 홍보가 부족하다. 관심이 있는 사람조차 충분히 알기 어려운데, 관심이 없다면 정말로 알기 힘들 것
지원 정책 액수가 너무 적다. 때문에 지속되거나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힘들다.
타 지역에 비해 치안이 좋지 않은 것이 체감됨. 청년 안전 정책 강화되어야
타 구처럼 청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많이 신설되길 바람 예) 미취업청년 자격증 취득 비용지원, 관악구 희망두배통장 추가모집, 1인가구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사 시 공인중개수수료 지불 등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주거환경 및 육아환경 조성
지역 내 청년정책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출산지원정책(지원금), 금천페이
지역 문제에 근착하는 복합정책으로서의 설계가 필요

[표 23] 금천구의 청년정책과 관련한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



[그림 30] 청년정책 간담회 현장(1)



[그림 31] 청년정책 간담회 현장(2)

금천미래발전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참석자들의 저녁식사와 동시에 진행된 FGI 조사 결과, 금천구의 청년들은 주로 주거 및 치안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산4동에 거주하는 한 20대 여성은 작년에 반지하 방에 풍수 피해가 있었다며 우려를 표했고, 강동구에서 금천구로 이주한 30대 남성은 금천구 환경이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와 유사하다며 도시개발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반면 시흥1동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은 금천구 원룸 집이 6평으로, 혼자 딱 살기 좋다고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을 드러냈다. 치안에 관련해서는 한 20대 여성은 금천구를 다닐 때 무섭다는 느낌이 들고, 금천구의 강력범죄 발생률이 3위로 청년이 다니기 힘든 환경임을 언급하며 CCTV 설치 및 도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치안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결혼 및 출산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20대 남성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며 본인 얘기보다 다른 문제 같다고 응답하였다. 이어 돈을 주더라도 결혼하지 않을 사람은 하지 않고, 책임을 지는 것이 싫으며 현재 이혼율도 높고 직장 하나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결혼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30대 여성은 결혼을 하지 않을 전제로 연애를 하였고, 출산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노산이 싫고 경제적인 확신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그 외에도 저출생이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청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정책 홍보 방식에 대한 의견 역시 제안되었다. 한 20대 남성은 정부의 정책은 효능감이 없다고 밝혔다. 현수막도 잘 보지 않기에 지하철, 버스, 마트에 정책을 광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전입신고 등 주민들이 행정업무를 요청할 때 관련된 정책이 담긴 브로셔를 배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20대 여성은 정책 홍보가 부족하다며 홍보 채널을 다양하게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청년몽땅정보통’ 등을 참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금천구의 시설에 만족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해당 응답자는 가산동의 주차공간이 좋고 시설이 깔끔하다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나 1인가구 청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적은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1인가구 센터에서 전세사기 예방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현재의 상황이 만족되어야 미래가 있다며 여유를 찾게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금천구의 청년들은 미래에 다가올 문제를 예방하는 정책보다는 현재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더욱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결혼이나 출산과 관련해서는 대다수가 현재의 생계가 해결되어야 생각해볼 수 있을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서비스의 지원보다는 금전 지원과 같은 물질 지원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서 집계된 응답을 참고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의원 연구 모임

금천미래발전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7월 26일 수요일, 8월 9일 수요일 두 차례에 걸쳐 자체적으로 연구 모임을 진행하였다. 1차 연구모임에서는 출산율 및 인구 증가와 관련하여 공부해온 안건을 공유하고 이를 금천구에 도입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2차 연구모임에서는 1차 연구모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바탕으로 출산율 및 인구 증가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였다.

7월 26일에 진행된 1차 연구 모임에서는 각자 공부해온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참고하여 금천구의 현황에 맞춘 정책을 고민하였다. 해외 사례로는 프랑스, 스웨덴, 독일, 일본의 사례가 준비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90년대 후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 수 및 형태에 따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가족정책 위주로 전환하여 추진하였다. 스웨덴은 성평등 육아휴직 정책 시행으로 2010년부터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독일은 공공기관에서 아이의 숫자에 맞게 집 변경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일본은 부모와 자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축펀드를 시행하여 이를 벤치마킹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해외 사례를 통해 금천미래발전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어린이집부터 시작하여 육아와 관련된 여러 시설에 대해 공공분야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20대 초반의 출산율이 높은 금천구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기존의 금천구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방식을 금액 할인에서 정책 지원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역시 제시되었다. 주거지원 정책의 경우 금천구의 2022년 불용액이 약 1,300억이니 이 중 일부를 전세대출 이자로 지원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8월 9일에 진행된 2차 연구 모임에서는 1차 연구 모임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출산율 및 인구 증가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해당 모임에서 의원들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현실적으로 기저귀 및 분유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금천구의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경기도 광명시, 서울 구로구, 서울 관악구와 같은 주변 지자체와 비교하였을 때 보다 매력적인 출산 및 전입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전체적인 복지제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자격이 없어지거나 혜택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부분을 완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해당 연구모임을 진행하며 의원들 사이에서 의원연구단체 차원에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등 출산율 및 인구 증가와 관련된 금천구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모였다.

3. 대전광역시의회 방문 간담회



[그림 32] 대전광역시의회 방문 간담회(1)



[그림 33] 대전광역시의회 방문 간담회(2)



[그림 34] 대전광역시의회 방문 간담회(3)

금천미래발전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10월 16일 월요일 14시에 대전광역시의회 3층 공감실에서 대전광역시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해당 간담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책팀장들이 참석하였고, 대전광역시의 출산 및 인구정책 추진 현황 공유를 통하여 자치단체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광역시의 인구수는 2022년 기준 전년대비 약 6천명이 감소하였으나, 출산율 관련 지표는 증가하였다. 대전광역시의 인구는 2013년 153.3만명을 정점으로 하여 2012년 7월 세종시가 출범하자 더불어 점점 감소하다 2014년 2분기부터 전입보다 전출인구가 많은 인구순유출이 시작되었다.

대전광역시 인구의 급등기라고 할 수 있는 1989년부터 2002년에는 둔산개발 진행 및 광역시 승격이 이루어졌으며, 인구수가 연평균 2.5% 증가하였다. 이후 2003년부터 2013년까지는 점증기로 불리는데, 이 사이에 세종시가 출범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인구는 연평균 0.68% 증가하였다. 세종시로의 본격 이주가 진행된 2014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평균 0.64% 감소하면서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는 2020년 기준 등록인구가 146만명인 것에 비해 생활인구가 162만명으로 약 10% 이상이 많고, 청년인구 비율이 대전 전체 인구의 26.9%로 청년인구가 30%를 차지하는 서울시에 이어 전국 2번째로 많은 도시이며 이는 전국 청년 비율이 25.0%인 것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젊은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인구증가책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중이다.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전년대비)	2023. 9월말
인구수(명)	1,489,936	1,474,870	1,463,882	1,452,251	1,446,072(6,179↓)	1,445,595
출생아수(명)	9,337	8,410	7,481	7,414	7,677(263↑)	5,586
조출생률(명)	6.3	5.7	5.1	5.1	5.3(0.2↑)	-
합계출산율(명)	0.95	0.88	0.81	0.81	0.84(0.03↑)	-
조혼인율(건)	5.0	4.5	4.1	3.7	3.9(0.2↑)	-

[표 26] 대전광역시 주요 인구지표

전반적인 인구는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의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을 비롯하여 출산 관련 지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편의시설 등 생활만족도와 수도권, 세종시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서울 혹은 세종시로 이주했던 주출생 연령층인 30대의 대전 유턴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2018년 대전세종 정책엑스포에서 발표된 연구자료에서도 생활·교육 인프라 등에 대하여 세종시민의 대전 의존도가 높아 대전으로 유턴할 것이라는 현상이 예견된 바 있다. 또한, 2021년 하반기 이후 대전의 주

택가격이 하락함과 더불어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청년세대의 가치관이 변화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세대의 정착을 위해 2자녀 부모 지하철 요금 면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부모 지원 확대 등 아이를 키우기 좋은 정책 환경을 조성하였고 방위사업청의 이전, 글로벌 기업 ‘머크’, 차세대 배터리 선도기업인 ‘SK온’ 등 기업의 투자 유치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출산을 증가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에서는 아동보육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청년정책과, 주택정책과 등 여러 부서에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사업명	내용	담당부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대전 거주 0~2세 영유아 - (내용) 매월 30만원 / 1인 최대 1,080만원 지원 - (실적) 월평균 22,220명 지원('22년 기준) 	아동보육과
꿈나무사랑카드 (다자녀카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대전 거주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부모 ※ 다자녀기준 완화 : 3자녀 이상 → 2자녀('23. 5월) - (내용) 대전 도시철도 요금 면제, 시 산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800여개 협력업체 할인 - (실적) 14,650건 발급 / 1,035개소 참여('22년 기준) 	아동보육과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유아교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 (대상)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3~5세 유아 - (내용) 1인당 매월 사립유치원 13만원, 어린이집 9만원 지원 	교육도서관과/ 아동보육과

사업명	내용	담당부서
<p>누리과정 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으로 무상보육 실현 - (대상) 민간 어린이집 재원 3~5세 유아 - (내용) 1인당 매월 87,000원 지원 - (실적) 4,489명 / 2,668백만원 지원('22년 기준) 	<p>아동보육과</p>
<p>대전형 아이돌봄 '온돌'네트워크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일·가정양립 위한 초등돌봄 인프라 구축 - (내용/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 통합정보 플랫폼(대전아이) 운영 ▶ 돌봄활동가 양성·과건 (90명 양성, 5,598회 과건 /'22년) ▶ 거점온돌방 조성(14개소 /'22년) 	<p>여성가족 청소년과</p>
<p>대전청년하우스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대전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 (내용) 기숙사 226실, 월 이용료 25만원 	<p>청년정책과</p>
<p>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만19~39세 이하의 청년 및 청년부부 - (내용) 임차보증금 1.5억이하인 전월세 주택 대출 추천 및 이차지원 	<p>청년정책과</p>
<p>대전청년월세 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만19~39세 이하의 청년 및 청년부부 - (내용) 월세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 만원 이하 주택 월세거주 청년 월20만원씩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p>청년정책과</p>
<p>대전청년내일 희망카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대전지역 만18~34세 청년구직자 - (내용) 구직 활동비 월50만원,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p>청년정책과</p>
<p>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대전지역 만18~39세 청년 - (내용)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월15만원 시 지원금 1:1 매칭 	<p>청년정책과</p>

사업명	내용	담당부서
대학생학자금 이자 지원 및 신용회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대학생, 만39세 이하 - (내용)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 회복을 위한 분할 상환 약정 초입금 지원 	청년정책과
청년주택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건설형 청년주택(행복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대학생, 직장인, 신혼부부 등(만19~39세) - (자격):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input type="checkbox"/> 매입형 청년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도심지(역세권)내 신축 준공된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 (방법) 신축주택·오피스텔 매입 후 청년주택 임대 	주택정책과

[표 27] 대전광역시 출산율 증가 관련 인구사업

대전광역시는 자치구 수가 5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지는 않았으나,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확대 개편 시 시-구회의 3회 개최 등 시-구 인구정책 사업의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제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자치구 현안에 대한 대전세종연구원 컨설팅 등광역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와 민간 간의 대표적인 협력으로는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가 있다.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는 대전광역시와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간의 협의체로, 아버지의 육아 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가족친화적 사회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해당 사업에서는 영유아 가정의 아버지 100명을 모집하여 육아에 대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 동반활동 등을 추진하는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지역 매체를 활용하는 것을 홍보한다.

대전광역시와 대전세종연구원 간의 협력으로는 시 인구정책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진행하고 정책개발의 필요성 등을 지원하는 연구를 한다. 예시로 대전지역 외국인 인구 현황과 유입 정책 방향 연구, 2022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 전국 유일 증가 원인 분석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낮은 체감도에 대응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설계한 사업을 지원하여 장기 저출산 극복 등에 기여하고자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예산을 3억원(시 100%)에서 15억원(시 70%, 구 30%)으로 증액하였고, 과목을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변경하였으며 우수 2개구에 75백만원과 3개구에 50백만원을 제공하던 것을 최우수 8억, 우수 4억, 보통 3개구 1억으로 재편하였다. 또한 정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차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시 인구정책 중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여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공모대상 사업을 사전 시-구간 설정한 사업범위로 한정하여 사업취지의 자의적 해석과 이탈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2024년도에는 2022년도 인구지표 개선의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대전세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과제 결과에 따라 공모사업을 설계하고 평가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인구정책 SWOT 분석을 병행하여 강점과 기회는 강화하고, 약점과 위협요인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예정 중이다.

구분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내용
동 구	장르음악 공연장 조성	800	PUB 형태 여가시설 조성 생활인구 확보 (비사용 자치구·시설 리모델링)

중 구	도심속 작은 힐링 쉼터 우리들공원 休공간 으로 재창조	400	우리들공원 재정비를 통한 문화시설 조성 으로 주거여건 개선
서 구	함께 소통하는 가족 복합 문화공간 조성	100	도매1,2동 주민거점시설에 공유주방 등을 조성, 지역 정주여건 개선
유성구	쾌적하고 안전한 방과후 돌봄환경 조성(5개소)	100	화재안전 보강, 노후시설 보수 등 아동 시설 안전도 향상
대덕구	어르신 돌봄놀이터 '노슈' 조성(2개소)	100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건강·의료기 기, 주방설치 등을 통한 어르신 공동체 활성화

[표 28] 대전광역시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2023년도 사업내역

4. 충청남도의회 방문 간담회



[그림 35] 충남도의회 방문 간담회(1)



[그림 36] 충남도의회 방문 간담회(2)

금천미래발전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2일차인 10월 17일 화요일 11시에 충청남도의회 1층 101호 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해당 간담회에는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하였고, 충청남도의 출산 및 인구 정책에 대해 교류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금천구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5182.6만이었던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충청남도의 인구는 최근 10년간 212.6만 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았던 2018년 이후로 4개월 연속 최고인구수를 갱신하고 있다.

(단위 :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9월기준)
전 국	51,826,059	51,849,861	51,829,023	51,638,809	51,439,038	51,370,001
충 남	2,126,282	2,123,709	2,121,029	2,119,257	2,123,037	2,127,630

[표 30] 충청남도 인구 현황

충청남도는 「힘센 청춘도시 충청남도」를 비전으로 삼아 인구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첫 번째 목표는 생활인구의 증가이다. 주민등록인구 및 주요 관광지의 인구, 외국인 인구를 포함한 2022년 기준의 445만 명에서 2027년까지 490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490만 명이라는 수치는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하고, 평균 증가율 1.4%, 2.2%에서 보다 3.0%로 상향하여 잡은 목표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22년 기준으로 귀농 3위, 귀어 1위, 귀촌 2위인 현 상태에서 나아가 2027년까지 귀농·귀어, 귀촌 종합 1위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 목표는 청년 유입인구의 증가로, 2022년 기준 순이동 771명에서 2027년까지 2만명이 유입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평균 증가율인 0.6%에서 상향한 0.85%에 맞춘 수치이다.

충청남도의 인구 정책의 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권역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특징과 특색을 살려 차별화된 인구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정·도정계획 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지역과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역 내 거점중심에 투자를

집약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인구정책 재원 규모는 5대 전략과 15개의 실천과제, 70개의 세부 사업을 합쳐 총 6조 2,261억 원이다.

충청남도는 권역별로 맞춤형 인구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메가시티의 경우 '충남북부권과 경기남부권간 상생협력을 통한 베이벨리 메가시티(인구 330만명, 기업 23만개, 대학 34개, GRDP 204조원) 건설'과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으로 수도권 일극화 극복을 추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청년농 유입에 초점을 맞춰 농업·농촌 시스템 개선을 위해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조성, 농촌형 리브투게더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의 9개 시군으로, 2022~2023년 1,722억원을 확보해 둔 상태이다.

광역시에서는 농촌리브투게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남부권 산후조리원 등의 5개 사업을 실시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주에서 미리 살아보기, 부여 백마강 123사비 청년공예마을 활성화, 논산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조성, 금산 육아돌봄 거점 아이조아센터 조성, 서천살이 공동주택 개발사업, 태안 해양치유 복합단지 조성 등의 44개 사업을 실시한다.

서남부권 지역맞춤형 발전계획 수립의 경우 서남부권 지역맞춤형 발전계획을 수립함과 함께 전라북도와 5개의 협력사항이 있는 초광역협력을 추진한다. 이는 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 협력, 종교성지 순례 연계화, 관광자원 연계 상호홍보, 지역약초산업발전, 수소 및 에너지 사업 공동협력, 초광역 인프라 확충협력 협의체 구성, 공동연구 협력 등의 내용이 있다.

도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역시 진행하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전국 최초로 2008년부터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정 및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이 중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는 2007년에

제정되었고, 특별회계는 2008년에 설치되었다.

제1단계 사업은 총 1~3기로 총 198지구, 1조 909억의 예산을 들여 2008년에서 2020년까지 추진 완료되었다. 1단계 사업의 내용에는 483억의 공주문화관광단지조성, 420억의 옛대천역사문화관광지조성, 135억의 국제인삼약초 연구센터건립, 175억의 부여도심 상권 활성화 등이 있다.

제2단계 1기 사업은 2021년에 시작하여 2025년에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로, 84지구의 예산 6,919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 중 234억은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128억은 나래원수목장 및 시설확충, 188억은 백제문화 스타케이션조성사업, 285억은 부여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에 사용된다. 2단계 2기 사업은 현재 전략수립 및 사업발굴을 위하여 충남연구원에서 과업을 수행 중이다.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저출산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청남도의 출생아수는 2022년 대비 763명이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은 2022년 대비 0.05명이 감소한 상황이다. 그에 따라 2023년 통계 추정치는 출생아수 1만 명을 달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단위 : 명)

구 분	지 역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출산율	충남	1.19	1.11	1.03	0.96	0.91
	전국	0.98	0.92	0.84	0.81	0.78
출생아수	충남	14,380	13,228	11,950	10,984	10,221
	전국	326,822	302,676	272,337	260,562	249,186

[표 31] 충청남도 출생아 수

저출산 등 사회적 영향으로 영유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에 있다.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3,457명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집 역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소/명)

구 분	'23. 7월	'22. 7월	'21. 7월	비 고
어린이집	1,418	1,529	1,646	'22. 7월 대비 111개소 ↓
영 유 아	46,068	49,525	54,139	'22. 7월 대비 3,457명 ↓
교 직 원	13,380	13,814	14,277	'22. 7월 대비 434명 ↓

[표 32] 충청남도 어린이집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비고(증감)
임신·출산	38,279	39,213	934 ↑
영유아 보육	688,333	749,750	61,417 ↑

[표 33] 저출산 관련 예산 현황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임신·출산 및 영유아 보육에 대한 예산을 증가시켰고, 다양한 출산 및 돌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출산 정책은 6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충남흥성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이다. 2022년 1월 24일에 개원한 공공산후조리원은 겸직의사 2명, 간호사 6명, 간호조무사 3명과 조리사 등이 포함된 13명으로 운영되며, 도비 4.5억과 군비 4.5억을 합친 9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급자와 장애인, 셋째 이상 등의 취약계층에게는 이용료의 10~50%를 감면하고 있다. 이용 만족도 점수는 2023년 평균적으로 93

점을 기록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충남논산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이다. 현재 건축물 기본 및 실시설계중이며, 개원은 2025년 상반기를 예정하고 있다. 부지면적 2,500㎡, 연면적 1,700㎡ 산모 15인실의 규모로 설계된 논산 공공산후조리원은 도비 50억, 시비 60억을 합쳐 110억의 예산을 소모한다.

세 번째는 임신부 우대금리 적금이자 지원인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산모를 대상으로 한다. 이 정책에서는 농협 0.75%, 도 지원 1%의 우대금리를 지원함과 출산용품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번째는 난임부부 한방치료사업 지원으로, 한방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의 체질개선을 통하여 임신을 유도하는 목적이 있다.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범위 내의 한약 처방비를 지원하는데, 2021년에는 144명, 2022년에는 75명, 2023년 9월까지 130명이 이용하였다. 평균 성공률은 18.8%이다.

다섯 번째는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으로,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역에 산부인과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보령, 부여, 홍성, 논산의 4개 시군에 외래 2억원, 분만 개소당 9억원을 지원한다. 여섯 번째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여성 만 나이별로 최대 110만원의 시술 지원 상한을 두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시술 본인부담금 90%,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강화 역시 출산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아동 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첫만남이용권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며, 임신부 영유아 동반가족 퍼스트 트랙 역시 운영 중이다.

돌봄 정책으로는 8가지를 시행하고 있다. 첫 번째는 만 3~5세 아동 13,530명 대상의 345억 원 예산으로 정부미지원 시설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인데, 2023년 복지부 발표 표준보육료 수준에 맞춰 차액보육료 등을 지원한다. 이 차액보육료는 3세가 203,700원, 4~5세가 164,100원에 교육환경개선비 인당 7만원으로 책정되었다.

두 번째는 정부지원시설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이다. 610명 대상, 151억 원의 예산으로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 유아반 인건비를 100% 지급한다. 세 번째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으로, 만 0~5세의 49,000명의 아동에게 245억원의 예산으로 영유아 1인당 월 5만원의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네 번째는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이다. 49,000명에게 37억 원으로 2023년 7월부터 급간식비를 3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 다섯 번째는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이다.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 1~2세의 아동 25,124명에게 충남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이다. 여섯 번째는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의 운영이다. 4개소의 3.3억 원의 이 돌봄센터는 정부 돌봄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수요자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추진되었다. 지원 대상은 국비사업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지원 기준과 동일하다.

일곱 번째는 충남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의 설립으로, 2024년 개원 예정인 도내 초등돌봄 통합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의 설립을 추진 중이다. 여덟 번째는 어르신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운영으로, 보육교사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교재·교구정리, 취사·배식, 청소 등의 보육 외 업무를 맡는다. 이 정책에는 136명, 20.8억원이 배정되었다.

5.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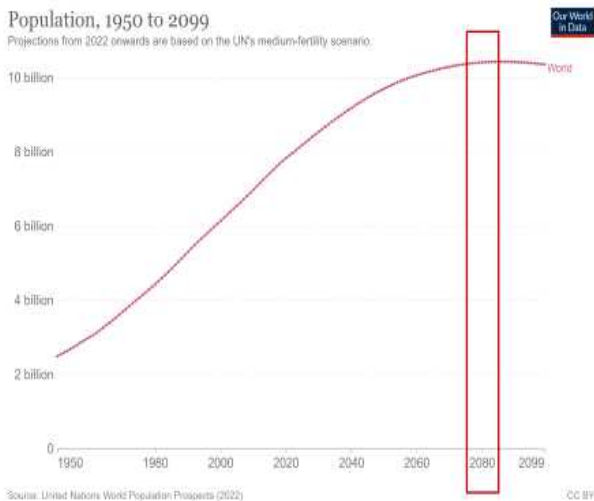


[그림 37] 카이스트 방문 (1)



[그림 38] 카이스트 방문 (2)

금천미래발전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10월 16일 월요일 대전광역시와의 간담회를 마치고 16시에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을 방문하여 인구 전문가인 서용석 교수의 ‘저출생 현황 및 지자체의 대응 방안’ 세미나를 수강하였다. 해당 세미나에서 의원들은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황을 듣고, 이에 대하여 지자체가 가져야 할 자세와 대응 방안에 대하여 공부하였다.



[그림 39] 1950년부터 2099년까지 인구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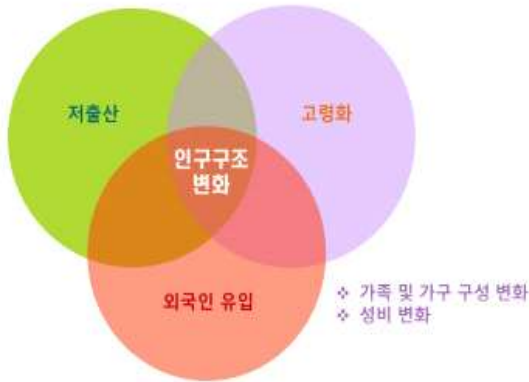


[그림 40] 선진국과 개도국의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 추이(1950~2050)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표와 같이, 2099년까지 인구는 어느정도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화 비율 추이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선진국은 이미 고령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대 수명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보건 및 위생 수준이 향상되고 의료 기술 접목으로 인해 오래 사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를 견인하는 3대 요소



[그림 41]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를 견인하는 3대 요소

자치구별(1)	2022	
	인구(만)	합계출산율
서울특별시		0.593
종로구		0.477
중구		0.606
용산구		0.596
성동구		0.723
광진구		0.461
동대문구		0.620
중랑구		0.659
성북구		0.649
강북구		0.483
도봉구		0.573
노원구		0.716
은평구		0.613
서대문구		0.607
마포구		0.529
양천구		0.608
강서구		0.588
구로구		0.684
금천구		0.588
영등포구		0.671
동작구		0.567
관악구		0.422
서초구		0.559
강남구		0.490
송파구		0.598
강동구		0.719

서울시 자치구별 출산율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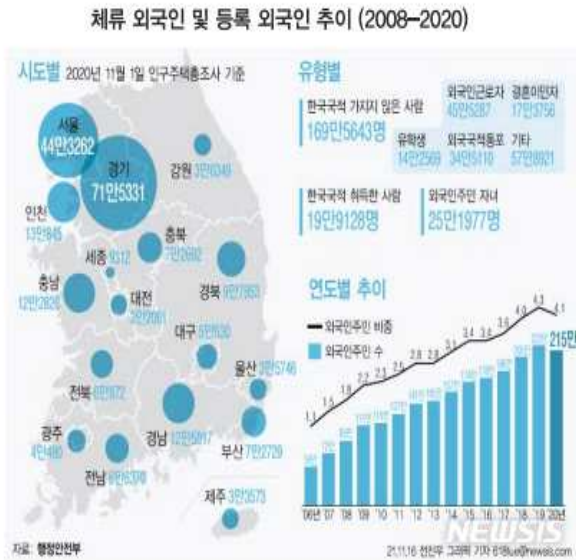
서울시
2023년 2분기 출산율은 0.53

[그림 42] 2023년 서울시 2분기 출산율

우리나라에 인구구조 변화를 가져오는 3대 요소는 저출산, 고령화, 외국인 유입을 들 수 있다. 저출산의 경우 2022년의 합계출생률은 0.78이었고, 2023년 2분기 기준 서울시 출산율은 0.53이었다. 서울시의 경우 대단위 아파트 밀집 단지가 많은 구일수록 높은 출산율을 보였다. 반면, 연립주택 혹은 단독주택이 많은 자치구에서는 낮은 출산율을 보였다.

이는 25개의 자치구 중 4개의 예외 사례를 제외하고 21개의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보였던 현상으로, 서용석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이는 교육 및 보육과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만들어야 하나,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아이를 맡기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 차이로 인해 출산율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림 43] 체류 외국인 및 등록 외국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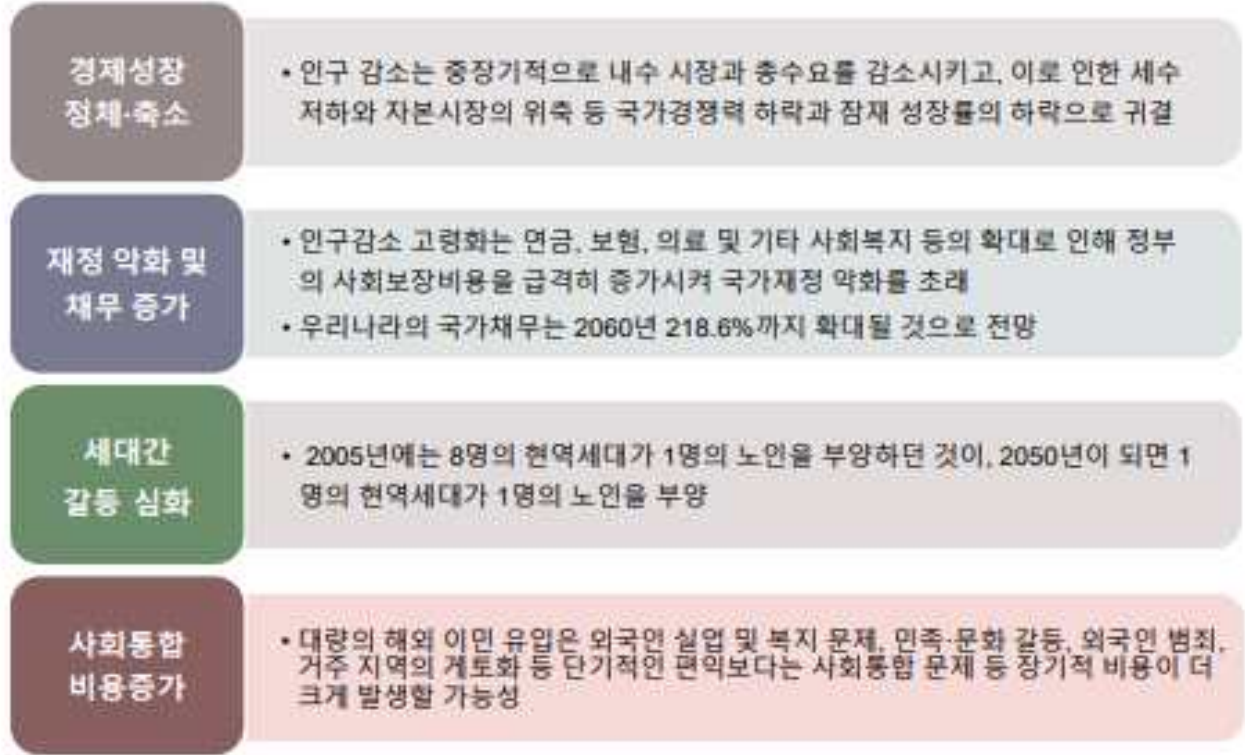


[그림 44] 고령자 가구 증가 추이

이전에는 외국인이 주로 수도권에 많이 거주하였으나, 최근에는 농어촌에서도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는 약 230만명으로, 불법 체류자까지 합산하면 250만명 이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비수도권에서는 근로자를 찾기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 역시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중 노인 1인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비관론



[그림 45] 인구구조에 대한 비관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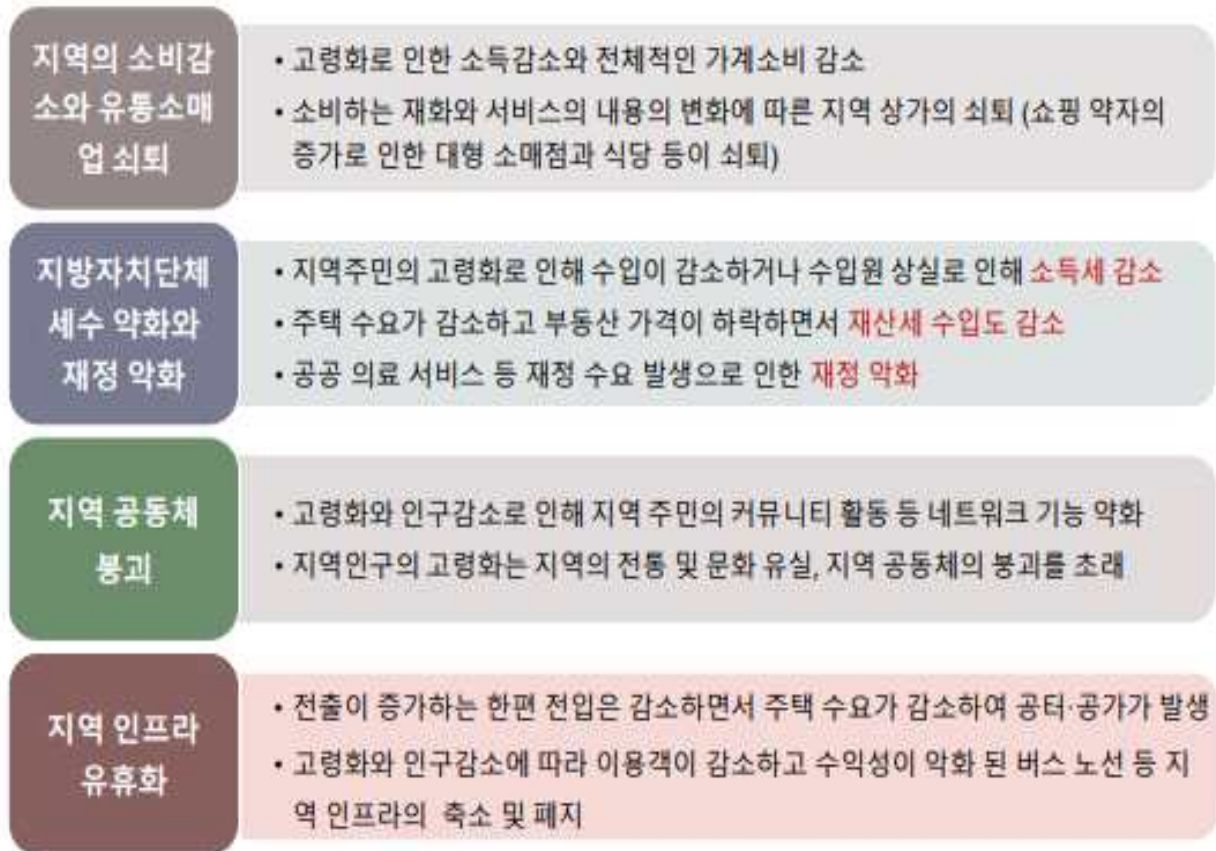
인구 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비관론, 낙관론 두 가지의 관점이 소개되었다. 현재로서는 비관론이 우세한데, 해당 관점에 따르면 인구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내수 시장과 총수요를 감소시키고, 이는 세수 저하와 자본시장의 위축 등 국가경쟁력의 하락과 잠재 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정체시키고, 축소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연금, 보험, 의료 및 기타 사회복지 등의 확대에 의해 정부의 사회보장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키며 국가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며, 2005년에는 8명의 현역세대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던 것에 반해 2050년에는 1명의 현역세대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되어 세대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타났다.

대량의 해외 이민 유입을 외국인의 실업 및 복지 문제, 민족 및 문화 갈

등, 외국인 범죄, 거주 지역의 계토화(특정 민족이 사회의 주류 민족과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 등 단기적인 편익보다는 사회통합의 문제 등 장기적 비용이 더욱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인구구조변화가 지역에 미칠 영향



[그림 46]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에 미칠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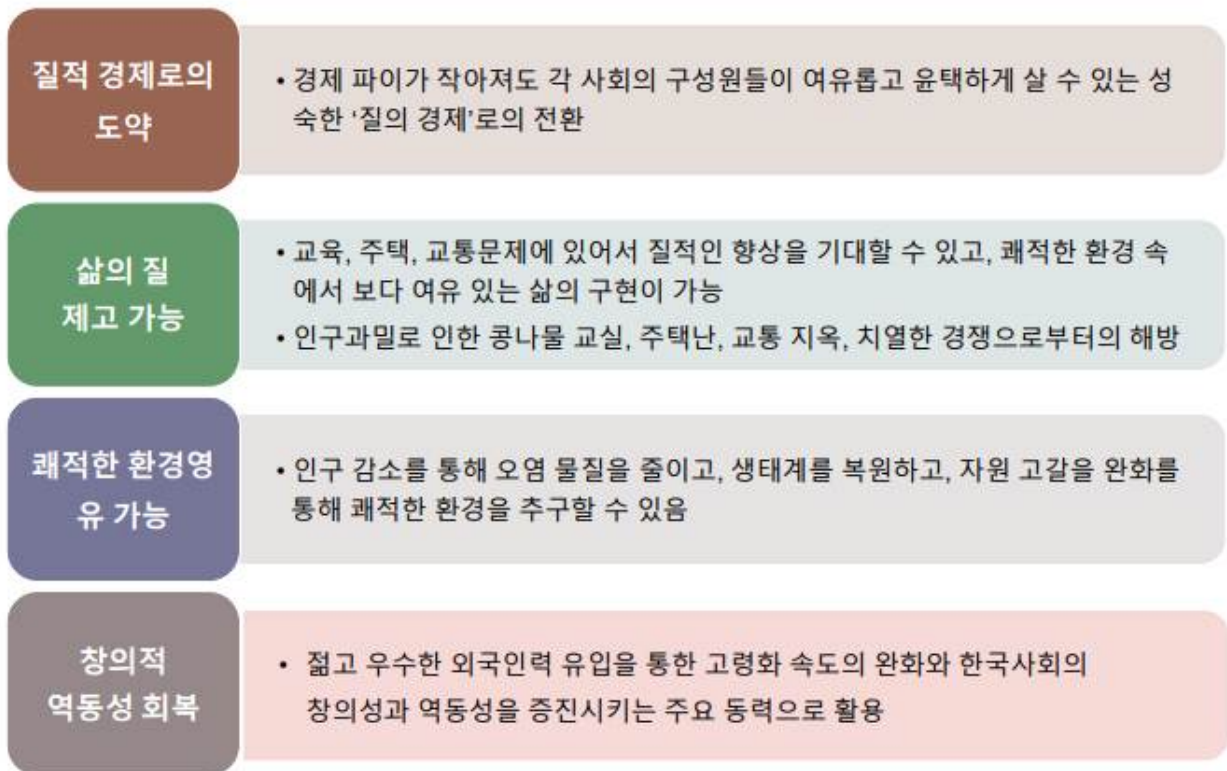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역의 소비감소와 유통소매업의 쇠퇴, 지방자치단체 세수의 약화와 재정 악화, 지역 공동체의 붕괴, 지역 인프라의 유희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선 고령화로 인해 소득과 전체적인 가계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쇼핑 약자의 증가로 인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내용의 변화하게 되어 대형 소매점과 식당 등 지역 상가의 쇠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지역주민

의 고령화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거나 수입 상실로 인해 소득세가 감소하고,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지며 재산세 수입의 감소로 이어지며 공공 의료 서비스 등 재정 수요 발생으로 인한 재정 악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활동 등 지역의 네트워크 지능이 약화되고, 지역인구가 고령화되면 지역의 전통 및 문화 유실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전출은 증가하는 것에 반해 전입은 감소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공터와 공가를 발생시킨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이로 인해 이용객이 감소하여 수익성이 약화된 버스 노선은 폐지되는 것과 같이 지역 인프라의 축소 및 폐지를 가져올 수 있다.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낙관론



[그림 47]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낙관론

반면 낙관론에서는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질적 경제로의 도약을 가져올 수 있고,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으며 쾌적한 환경을 영유할 수 있고, 창의적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경제의 전체적 파이가 작아져도 각 사회의 구성원이 여유롭고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성숙한 ‘질의 경제’로 전환할 수 있으며, 교육, 주택, 교통문제에 있어서도 질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금보다 여유 있는 삶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과밀로 인한 주택난, 교통지옥과 같은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인구감소가 발생하면 이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감소하고, 이는 생태계 복원과 자원 고갈의 완화를 불러일으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본다.

고령화의 속도는 젊고 우수한 외국인력의 유입으로 완화시키고, 이들을 한국사회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증진시키는 주요 동력으로 활용하자는 방안 역시 제시되고 있다.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4가지 미래전략 옵션



[그림 48]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4가지 미래전략 옵션

인구구조에 대응할 4가지의 미래전략 옵션으로는 ‘인구감소 고령사회 대응’, ‘다문화 이민사회’, ‘인구감소 고령사회 적응’, ‘남북통일’ 이 제기되었다.

서용석 교수에 따르면, 사회 구조의 변화로 성숙화된 산업사회에서 자녀는 더 이상 노동력이나 자산이 아니라 비용에 해당한다. 또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자기개발을 하며 투쟁하기에 결혼이나 출산에 투자할 시간이 없다고 느낀다. 또한, 의외로 교통, 교육, 주거와 같은 실생활 문제보다 기후위기로 인해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말하는 커플이 다수이며 유교적인 가치관이 시간이 지나 점점 희석되면서 가치관의 변화가 발생한 것이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방식이 제기되었는데, 먼저 개방적 이민 정책을 통한 다문화 이민사회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족한 인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이지만 한국의 언어 문제로 인해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데에 불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은 고민해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또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에 인구정책의 목표를 인구의 증가가 아닌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완화와 적응으로 설정하여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적응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예시로 일본의 ‘총활약사회’는 여성과 고령자 역시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건 바 있다.

인구의 양보다는 질로 승부해야 할 필요성 역시 제기되었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8명, 24만 9천명 출생아 시대가 도래했기에 이제는 그 어떤 아이도 포기할 여유가 없으며 인구나 인력이 아닌 인재로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 속담 중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

는 말에서 착안해 3개 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거타운 혹은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시각이 제시되었는데, 일본의 경우 3세대가 근처에 거주하면 세제 혜택 혹은 분양권을 제공하고, 독일 역시 3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타운을 건설중에 있다.

서용석 교수는 정해진 미래는 아무것도 없으며, 미래는 현재의 우리가 어떠한 결정과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 어떤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현재 역시 변화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제4장 타 지자체 및 해외 인구정책 우수사례 분석

앞서 제시된 금천구의 현황과 청년들의 의견 및 의원 연구모임, 국내 시찰, 전문가의 강연 등을 종합하여 금천구가 나아갈 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참고할 만한 사례들을 종합하여 분석해 보았다.

1. 청년 및 신혼부부의 유입



[그림 49] 영종 씨사이드파크



[그림 50] 영종하늘도시 체육공원

앞서 금천구의 인구가 인근의 타 지자체로 유출되는 만큼, 금천구 역시 인근의 청년가구 및 신혼부부의 유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천구 내 인프라의 개발이 필요한데, 주변 인프라 개발로 인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유입이 일어난 사례로 인천광역시 영종1동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영종1동의 경우 ‘영종하늘도시’가 조성되며 신규 아파트가 입주하였고, 영종하늘도시 체육공원이 건설되었으며 인근에 공원인 ‘씨사이드파크’나 학교시설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어 젊은층의 유입이 증가한 바 있다.



[그림 51] 음성군 ‘청년대로’ 간담회



[그림 52] 영월군 청년의 날

금천구의 청년과 신혼부부의 유입이 발생하려면 젊은층이 정착할 수 있는 신규 단지의 개발이 핵심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신규 단지의 조성 이외에도 일자리 정책 등을 수립하여 청년인구의 유입을 기대하는 방법도 있다.

예시로 충청북도 음성군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청장년층 유입을 위한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하여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15세 이상 고용률 71.9%, 15~64세 고용률 78.5%, 경제활동 참가율 73.6%로 충청북도 11개 시군 가운데 1위를 차지하였으며 전국 일자리 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음성군에서는 청년지원 종합거점 공간인 청년센터 ‘청년대로’를 열어 청년 취창업 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문화·복지와 공간 지원 등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청년의 정주환경에 대한 개선 역시 청년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강원도 영월군의 경우 ‘청년이 희망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유있는 삶 보장, 만족 있는 정주환경 조성, 성장하는 인재 육성, 영향력 있는 리더 양성 등 ‘청정 영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2021년 영월군 인구 37,904명의 4%에 해당하는 1,566명의 유입을 이끌어냈고, 유입인구 중 37%인 579명

은 39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월군은 명사 초청 토크콘서트, 힐링캠프, 맞춤형 청년 강좌 등으로 청년들에게 여유 있는 삶을 제공하려 하였고 청년 행복주택 건립, 청년창업 활성화 지대 등으로 만족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비즈니스 스쿨, 영월창업허브, 청년 장기근속 수당 등을 제공하여 성장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 정책위원회, 청년 정책네트워크 등을 운영하여 영향력 있는 리더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수상 사례



[그림 53]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안양시 우수상 수상



[그림 54]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시흥시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 안양시는 2022년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경기도 안양시는 주거정책으로 4자녀 이상 무주택 가정에 임대료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는 ‘다둥이네 보증자리’ 사업, 만19세~39세의 미혼 무주택자가 입주할 수 있고 인근에 주민 편의시설을 모은 ‘스마트케어하우스’가 있는 ‘두루미 하우스’를 개소하였다.

또한 자녀 성장주기별 맞춤형 돌봄정책을 시행하였으며, 만안구·동안구 두 곳에 각각 1개소씩 24시간 시간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전

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연2% 한도 이내에서 지원해주고, 야외정원 결혼식 무료 대관 등 청년친화적인 정책을 주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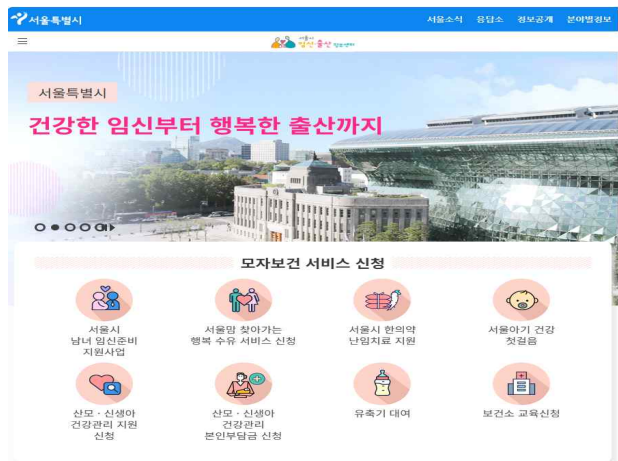
금천구 인근의 시흥시 역시 2023년 10월 2023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시흥시는 2021년 우수상, 2022년 장려상을 수상한데 이어 2023년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시흥시는 ‘민관학 협력 시흥형 돌봄 모델’ 을 제시하였고, ‘온마음 돌봄으로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는 THE(더~) 아이 꿈꿈’ 을 통해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 제정과 조직 개편 등 제도 마련 역시 수반되었다.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시흥형 초등돌봄 통합 플랫폼 및 콜센터를 구축하였고, 학교 돌봄터 추가 증설, 돌봄기관 양적 확대, 마을 협력 돌봄 공간 조성 등 아이 양육에 대한 서비스 및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시흥시민의 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일시 돌봄’, ‘초등돌봄 운영시간 연장’, ‘다문화 가정 돌봄서비스 통역 지원 확대’ 등 초등돌봄에 특화된 사업을 진행하였다.

3. 출산정보 안내 포털사이트



[그림 55] 인천 계양구 출산정보사이트 ‘아이조아계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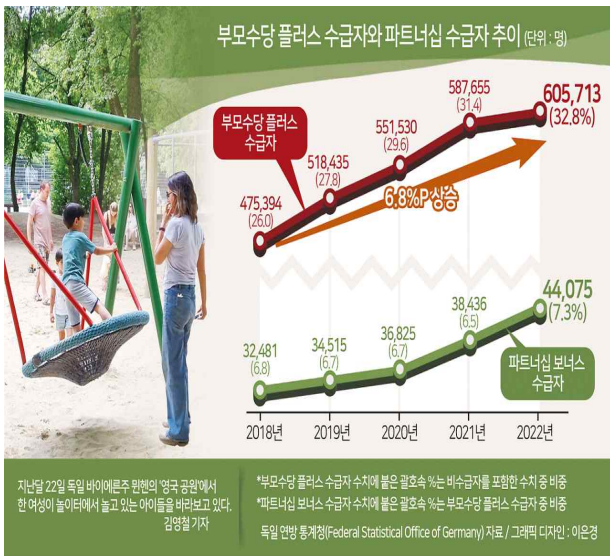


[그림 56]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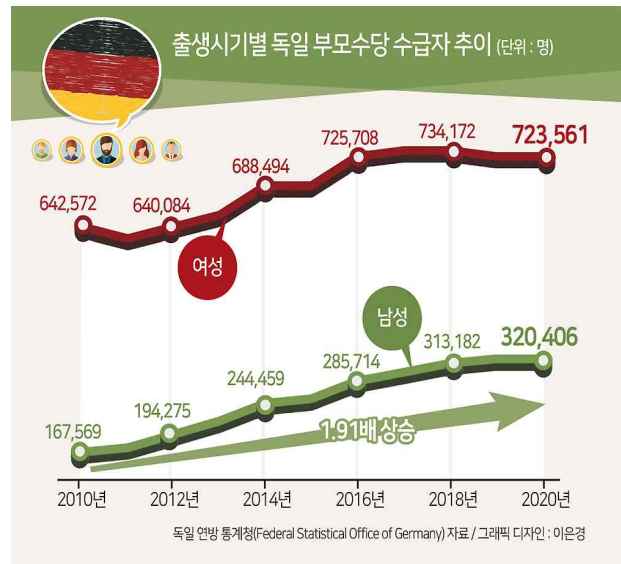
인천 계양구는 계양구의 출산정보를 한데 모은 포털사이트인 ‘아이조아계양’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조아계양’에는 임신, 출산, 양육 정책 정보는 물론 가족, 일자리 정책 및 정보 역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책자 ‘아이 LOVE 계양’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서울특별시에서도 홈페이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를 통해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모자보건서비스 안내 및 아이를 위한 의료기관, 수유시설 등의 안내 지도, 임신·출산·육아 정보 등을 안내하여 정책 안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4. 국외 인구정책 사례



[그림 57] 독일 부모수당 플러스 수급자 및 파트너십 수급자 추이



[그림 58] 출생시기별 독일 부모수당 수급자 추이

출산정책에 대하여 참고할만한 국외 사례로는 독일과 일본을 선정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초 1.26까지 하락한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그 주변의 수치를 머무르다 2007년~2008년 이후 반등하였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분단국가였다는 특징이 있고, 보수

가톨릭 국가이기에 우리나라의 유교사상화 통하는 부분이 있다.

독일에서 시행한 모성보호·친가족적 정책이 반등의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으로는 보육시설 확대, 육아휴직 시 순소득의 67%를 지급하는 부모수당을 도입 및 세제혜택 확대, 관대한 육아휴직 및 탄력근무제 등이 있다. 또한, 아동수량을 18세까지 구직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21세까지, 대학생의 경우 25세까지 월 250유로, 한화로 약 35만원을 매달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지자체 차원에서의 보육정책도 잘 갖추어져 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보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자체 내 기업에서는 가족친화적 인사정책을 시행하며 형제자매 가정의 아동과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보육할인 수준을 결정한다. 또한, 유모차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방과후학교, 건강검진 지원 등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독일은 고소득 가정에도 아동수당 지원 및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는 다산 장려수단으로 볼 수 있다. 저소득 가정에도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은 아동수당과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고소득 가정에는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공제금액을 높임으로써 고소득 가정에 더욱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다. 또한 독일은 무상교육의 폭이 우리나라보다 넓다. 독일의 경우 대학은 물론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무료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생산인력을 확충하였다. 독일은 초고령화 사회에도 적응한 국가로도 유명하다.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외의 고급 인력을 영입하여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독일은 아동수당과 무상교육 정책에만 1년에 300조원 정도를 투자하는데, 독일 정부와 국민은 이를 세금의 낭비가 아닌 지속 가능한 국가를 위한 투자라고

본다.



[그림 59] 일본 어린이 패스트트랙

한국·일본 저출산 대책안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	일본
■ 주거 지원	신혼부부에 공공주택 43만호 공급, 2자녀 공공분양·임대 입주대상 확대	다자녀 세대 주택담보대출 금리 우대
■ 의료 지원	2세(생후 24개월) 미만 입원진료비 제로화	출산비 의료보험 적용...출산 시 50만엔(약 492만원) 지급
■ 아동수당	내년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	첫째 월 1만5000엔, 둘째 3만엔, 셋째부터 6만엔 전망
■ 육아기 근로 지원	근로시간 단축 초등 6학년(만12세)까지 상향...부모 1인당 최대 36개월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 이용
■ 교육비 지원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예정	수업료·김민 대상 다자녀 가구로 확대...상환 불필요한 장학금 확대

[그림 60] 한일 저출산 대책안 비교

일본은 ‘내집마련’ 자체를 지원하는 한국과 다르게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돌봄 인프라 자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경력단절여성을 고려하여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보육원에 아이를 보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또한,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아이를 낳지 않는 현실을 파악하여 육아수당을 고교생(18세)까지 확대하고, 도쿄의 경우 의료비용을 중학생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경우 20세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일본의 경우 자녀를 동반한 가족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아이에 대한 국민 의식부터 바꾸려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으로 남성 육아휴직 확대, 방문육아돌보미 사업 시행 등 양육 부담을 덜고자 제도를 확대하였으며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어린이가정청을 2023년 신설해 11개 부처에 흩어져있던 기능을 통합하였

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에서는 3세 이하의 아이를 둔 직원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성령(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의식 개혁 부분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일본의 육아 친화적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에 해당한다. ‘어린이 패스트트랙’은 공공시설 등에서 어린이를 동반하면 긴 줄을 서지 않고 별도의 출입구로 빠른 입장이 가능한 제도이다. 일부 지자체는 운전면허나 여권 신청시 어린이를 동반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의 경우 영국에서는 대영박물관에서 5세 미만의 아이와 보호자가 패스트트랙으로 입장이 가능하며, 싱가포르에서는 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임산부나 어린 아이가 있는 사람이 우선 승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제5장 결론

1. 서울 금천구 인구정책 방향 설정

금천구의 청년들의 의견과 의원 연구모임에서 논의했던 결과, 그리고 타 지자체의 사례와 전문가의 세미나를 종합해보았을 때 현재 금천구에서는 청년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위주로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청년인구의 증가는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대전의 환경이라는 이해관계가 합치되어 발생한 결과이고,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대전광역시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의 조성 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유치, 양육 비용과 주택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청년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사례로 들었던 음성군, 영월군에서도 청년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얻어낸 바 있다. 금천구 역시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여 청년들에게 금전적인 여유뿐만이 아니라 심적 여유와 삶의 여유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90년대 초등학교시절 독산3동 사는 친구네 집에 갈려고 그당시 살던 시흥4동에서 관악산(심원사 근처 산길)을 타고 친구네 자주 갔었습니다.

그당시엔 마냥 친구네 가는게 즐거워 몰랐지만,

어른이 되어서 생각해보니,

단칸방에 친구네 세식구 사는데 자주 놀러가던 제가 귀찮을법 했는데 항상 잘 챙겨주셨습니다.

참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근처를 가보면 비슷 합니다.

가파른 언덕에 시내에 흔히 보이는 중규모 슈퍼도 보기 힘들고,

[그림 61] 금천구 동서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인터넷 게시물 일부 발췌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권역별로 차별화된 인구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었으며, 출산과 보육에 대해서는 금전과 서비스 양면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천구에서도 균형 개발을 원하는 글이 금천구 주민모임 카페에 업로드된 바 있다.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금천구 서쪽에 비해 금천구 동쪽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더 격차가 많이 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시로 금천구 동쪽은 언덕이 가파르고, 중규모 슈퍼마켓조차 보기 힘들다며 인프라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었다. 금천구의 가파른 언덕은 간담회에 참석했던 청년 역시 지적한 바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

인구학 전문가의 세미나에서는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생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고, 인구의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점이 참고할 사항으로 선정되었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독일의 소득을 가리지 않는 재정 지원 및 고령사회에 적응해가는 정책, 일본의 재정 지원 정책과 수반되는 인식 개선 정책 등이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아이를 낳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소득 가정에도 높은 비용을 지원하고, 독일과 일본 모두 아이를 낳는 부부들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을 참고하여 금천구는 우선 자녀를 양육하는 젊은 부부가 많은 금천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젊은 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금천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20대의 합계출산율이 높는데, 20대는 상대적으로 재정적 기반이 약할 가능성이 높고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더욱 높을 것이기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 1명의 자녀만 계획하

던 가정도 2명, 3명의 자녀를 낳아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에 추가적인 보육 혜택을 지원하는 방법 역시 고려할만한 사항이라 볼 수 있다.

금천구와 타 지자체, 국외 사례를 비교해보았을 때 금천구 차원에서는 육아친화적인 환경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전광역시의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충청남도의 온종일 돌봄센터, 독일의 지자체 보육인프라 확충 및 유모차 접근성 확대, 일본의 보육원 제도개선 및 ‘어린이 패스트트랙’ 등 가족 편의성 제고와 같은 정책들을 참고하여 금천구에서도 육아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금천구 내 육아 커뮤니티의 형성 역시 육아친화적 환경 조성에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육아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대전광역시에서는 시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육아 커뮤니티를 형성하였다. 충청남도에서도 육아돌봄 거점을 형성하는 등 많은 지자체에서 육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금천구 차원에서도 육아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육아중인 부모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육아 정보 및 도움을 제공하는 등 육아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에 출산 의사가 있는 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생활 안정에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거문제의 수립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이미 금천구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보육 및 교육의 지원이 필요하고 양질의 인프라를 조성하여 금천구 자체적인 출산율 증가를 통한 인구 증가를 도모함과 동시에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계획이 있는 부부 및 육아중인 가정의 유입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육아와 관련된 조례의 제정도 금천구의 육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천구에서는 2022년 12월 30일 일부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금천구 보육정책위원회와 관련된 규정 및 구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등을 두어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하였다.

최근 육아 커뮤니티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임실군, 경기도 성남시, 충청남도 부여군 등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라북도 익산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등에서 공동육아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금천구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육아 커뮤니티 혹은 공동육아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육아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후속 연구 제안사항

금천미래발전연구회와 출산율 및 인구 증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금천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고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를 어떻게 유치하는지 들어볼 수 있었다.

금천미래발전연구회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비수도권과 경쟁해서 인구를 유치해야 하는데, 열심히 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에 대해 걱정하는 것과 동시에 비수도권의 정책을 참고하여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유입정책을 펴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

었다. 또한, 인구정책은 지역에 한정되어있는 것이 아닌 미래를 향한 정책이고 탈 지역적인 아젠다로 더 공부해보고 싶다고 하였다.

한편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모임이지만 정책을 내는데 급급하기보다는 인구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한 의원의 경우 지방소멸이 전국적으로 큰 문제인데 과연 금천구의 인구 유입이 중요하고 1순위인지 의문이 들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다른 관점으로, 금천구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유출을 막는 정책이나 이들에 대한 복지 및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후속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 정책에 대한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며, 인구와 저출산 문제는 지역에서 제한적으로밖에 나올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렇기에 지자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한편 현재의 복지도 좋지만 미래세대의 비용을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을 더 고민해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금천구의 교육수준 증진 방안 역시 추가로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천구의 학업성취도는 서울특별시 내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며, 이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40~50대 학부모 가정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인구의 유입도 중요하지만,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금천구가 인접한 지역에 비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논문

- 전광희. (2005.12). 유럽 선진국의 인구·가족정책의 전개과정: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사회과학연구 2005년 제16권
- 김승권. (2005).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국회도서관보
- Elis, V. (2008). The Impact of the Ageing Society on Regional Economics
- 전희경. (2010).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송유미, 이제상. (2011).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 최슬기. (2015). 한국사회의 인구변화와 사회문제 : 인구변동요인과 인구수/인구구조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2015년 여름호(통권 제106호)
- 김상민, 박진경. (2018).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 강원도 화천군을 사례로. 지방행정연구 제32권 제1호(통권 112호)

웹사이트

- 한국관광 데이터랩

<https://datalab.visitkorea.or.kr>

○ 아실

https://asil.kr/asil/sub/school_list.jsp

○ 호갱노노

<https://hogangnono.com/>

○ 아이조아계양

https://www.gyeyang.go.kr/open_content/childbirth/

○ 네이버 카페 ‘금천구 주민모임’

<https://cafe.naver.com/4543113/50272?art=ZXh0ZXJuYWwtdmVydmljZS1uYXZlcilzZWZyY2gtY2FmZS1wZG9yJmVhZ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pbnR5LnRpbnQ6ImF1dG86LWVhZGciLCJpc3N1ZWRBdCI6MTY5ODkwMzc1NzQwNn0.RCvHz1nIE7CtcorgP1Hf53wANFwxDuY4yf4CbUfm9Cw>

언론 보도

○ 헤럴드경제, 「인천 영종1동 인구 5만 돌파」, 2023년 6월 9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54372?sid=102>

○ 충북일보, 「음성군, 맞춤형 청년정책 성과」, 2023년 10월 17일.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84325>

○ 연합뉴스, 「영월군 유입 도시민 10명 중 4명 39세 이하...’청정 영월’ 효과」, 2022년 11월 26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6044900062>

○ 음성신문, 「음성군, 청년 소통간담회 ‘2023 청년 음성응성’ 성료」,

2023년 6월 27일.

<https://www.u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560>

- 에너지경제, 「[포커스] 안양시 출생아수 작년부터 증가…비결은?」, 2023년 3월 29일.

<https://m.ekn.kr/view.php?key=20230329010007059>

- 뉴스프리존, 「시흥시 경기도, 맞춤형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을 발굴...3년 연속 수상 쾌거」, 2023년 10월 12일.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9395>

- 이데일리 전략포럼, 「독일 캐나다 등 인구대응 사례 주목 이유는[ESF 0203]」, 2023년 5월 16일.

<https://esf.edaily.co.kr/2023/eng/MediaNews.asp?menu=0401&number=6440>

- KDI 경제정보센터, 「재정투입, 무상교육, 이민정책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돌파한다」, 2022년 3월,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12&cidx=13719&sel_year=2022&sel_month=04&pp=20&pg=1

- 중앙일보, 「국민 의식부터 바꾼다…韓출산을 2배, 일본의 차원 다른 대책」, 2023년 5월 21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3622#home>

- 머니투데이, 「“어린이 있으면 먼저 입장“...’패스트트랙’ 먼저 도입 日 반응 보니」, 2023년 5월 5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83601?sid=104>

- 헤럴드경제, 「[르포] “부모수당에 돈 걱정 ‘뚝’ ” …獨 아낌없는 돌봄[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②]」, 2023년 7월 21일,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721000627>
- KDI 경제정보센터, 「시대별 표어로 살펴본 우리나라 출산정책」, 2014년 12월,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2288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인구정책 어제와 오늘」,
<https://theme.archives.go.kr/next/populationPolicy/viewPolicy.do>